

제337회국회  
(정기회)

환경노동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15년10월19일(월)

장 소 환경노동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 1. 2016년도 예산안
  - 가. 환경부 소관
  - 나. 기상청 소관
-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가. 환경부 소관
- 3.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가. 환경부 소관

심사된 안건

- 1. 2016년도 예산안 ..... 2
  - 가. 환경부 소관
  - 나. 기상청 소관
-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2
  - 가. 환경부 소관
- 3.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 2
  - 가. 환경부 소관

(14시11분 개의)

○위원장 김영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7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산안 심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부터 환경부와 기상청을 시작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처 201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와 결산심사를 통해서 환경부와 기상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과 구체적인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 바람직한 정책 대안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에서는 이러한 정책 대안들이 내년도 예산에 적절히 반영되어 있는지 그리고

집행 실적이 부진하고 실효성이 없는 사업과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은지를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산안 편성은 정부가 하지만 이를 심의해서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우리 국회의 몫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지난 국정감사와 결산 과정에서 수집된 정보와 자료 등을 십분 활용하여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 경제 활성화와 국민 생활 향상에 쓰여질 수 있도록 충실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 위원회의 위원 사·보임이 있었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위원님께서 농림해양위원회로 가시고 이인제 위원님께서 우리 위원회로 보임되어 오셨습니다.

제가 17대 우리 이인제 위원님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모시고 했는데 보임을 축하드립니다.

간단히 인사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제 위원 이인제 위원입니다.

제가 환경노동위원회에 와서 일하게 된 것을 아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김영주 위원장님과 여야 위원님들 모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13대 때 제가 국회 처음 들어왔는데 그때 4년간 노동위원회에서 일했던 것이 상임위원회 활동 가운데 가장 행복한 시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 안 되는 시간이지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위원님들 모시고 열심히 일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6년도 예산안**

가. 환경부 소관

나. 기상청 소관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가. 환경부 소관

**3.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가. 환경부 소관

(14시14분)

○위원장 김영주 의사일정 제1항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환경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환경부 소관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먼저 환경부장관 나오셔서 환경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일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존경하는 김영주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의 환경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과 4대강 수계관리기금 및 석면피해구제기금의 운용계획안을 제안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고품위 환경복지의 조기 구현 토대를 마련해 나가고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환경정책 목표를 재정적으로 뒷받침하는 데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예산안의 편성 내역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세입 예산은 4조 9353억 원으로 편성하

였는데 환경개선부담금 등 자체 세입 1조 2166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3조 7162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 예산은 5조 6808억 원으로서 금년보다 0.7% 적게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출은 환경개선특별회계 4조 5577억 원, 지역발전특별회계 7682억 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2537억 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012억 원으로 구성됩니다.

다음으로 내년도 역점 재정사업을 간추려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높이고 생산적 환경복지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친환경차 투자를 대폭 확대하여 대기질 개선과 함께 온실가스 감축 기반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일반 휘발유 차량보다 이산화탄소가 70% 이상 적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자에게 대당 500만 원의 구입보조금을 지급하는 한편, 하이브리드차와 전기차 보급 대수도 각각 4만 대와 8000대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4개를 신규로 조성하는 한편, 재활용 산업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겠습니다.

그 밖에 물산업 육성과 유용 생물자원 발굴 분야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둘째, 환경 안전관리 역량 강화 부문에도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하수관거 예산 중 개·보수와 교체 투자 비용을 15년 13%에서 16년 28% 수준으로 높이고, 노후관로 정밀 조사·진단을 내년까지 완료함으로써 지반 침하 등 문제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세정제, 표백제 등 생활 주변에서 자주 사용하는 화학제품의 안전 확보를 위한 투자를 강화하였으며 화학사고 대응 역량을 확충하고 전문적 교육·훈련을 위한 예산도 대폭 증액하였습니다.

산모, 영유아 10만 명을 20년간 장기 추적 조사하여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는 코호트 스터디를 내년부터 본격 착수하겠습니다.

아울러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가는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피해자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재원 60억 원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환경서비스 개선을 위한 노력도 강화하였습니다.

환경예산의 35%를 차지하는 수질개선 환경기초시설 부문 투자를 합리화·내실화하였으며 노후차 조기 폐차 지원, 대기측정망 확충 등 미세먼지 관련 투자를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환경부 소관 기금의 내년도 운용계획안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수계관리기금 9845억 원으로 환경시설 설치·운영, 상수원 지역 주민 지원사업,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사용할 계획입니다.

또한 석면피해구제기금 476억 원을 조성하여 건강 피해자와 유족에게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잠재적 피해자를 찾아내는 노력도 지속할 것입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과는 별도로 하수관거 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 825억 원을 편성하여 하수 처리 효율을 높이는 데 사용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어려운 재정 여건하에서 필요한 예산을 충실히 확보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하였습니다만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내년도에 환경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정성을 다해 나가고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6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상세 보고는 기획조정실장으로 하여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환경부장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백규석 기획조정실장 나오셔서 예산안 개요 등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기획조정실장 백규석** 기획조정실장입니다.

2016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6쪽 환경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같음하고 7쪽, 세입·세출 예산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 2016년 환경예산 편성 방향입니다.

어려워진 국가재정 여건하에서 국민 행복과 고품위 환경복지를 구현해 나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중점 투자 방향을 설정했습니다.

첫째, 환경안전, 기후변화, 미래세대 환경보전 등 환경 현황과 미래 수요에 대한 선제 투자를

강화했고, 둘째 전기차, 물산업, 생물자원 산업 등 생산적 환경 투자를 전략적으로 확대했으며, 셋째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삶의 기초가 되는 질 높은 환경서비스를 확충하는 데에도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구조조정을 통한 환경 투자 내실화도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10쪽, 2016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입니다.

세입예산은 금년 대비 2.6%p 감액된 4조 9353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2억 원은 국유재산 토지대여료이며, 환특회계 세입예산은 4조 9328억 원으로 자체세입은 용자 원금 회수 증가 등으로 31억 증액되었으나 일반회계 전입금이 전년 대비 1370억 원 감액되어 결과적으로 전년 대비 2.6%p, 1339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안은 금년 대비 0.7%p 감액된 5조 6808억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환특회계와 지특회계가 각각 958억 원과 567억 원 감액되었고 에특회계와 농특회계가 각각 953억 원과 189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12쪽, 부문별 증감 현황입니다.

친환경차 확대 보급과 환경산업 투자 등으로 대기, 폐기물, 환경정책 부분이 각각 26.2·15.6·10.6%p 증액되었으며 상하수도·수질 부분은 SOC 사업 지출 효율화로 인해 7%p 감액되었습니다.

13쪽, 부분별 주요 사업입니다.

먼저 상하수도 수질 부분입니다.

상하수도 시설 안전, 물산업 육성 등에 증액 편성했으나 기존 투자 분야에 대한 지출 효율화를 도모하여 15년 대비 7%p 감액된 3조 4232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특히 수질개선 SOC사업 전반에 걸쳐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 총 2329억 원을 절감했으나 단위 하수도 등 낙후지역에 대한 투자는 확대했습니다.

14쪽입니다.

16년 276억 원을 추가 투입, 노후하수관로 정밀진단을 완료하고 하수관거 투자 중 교체·보수 투자 비율을 28% 수준으로 끌어올려 투자의 초점을 신설 투자에서 개·보수 투자로 전환해 나가고자 했습니다.

기존에 확정된 계획에 따라 물산업 육성을 위한 투자를 본격화했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물 환경 조성을 위해 수생태계 건강성 조사와 보건사

업을 지속 추진하되 특히 조류 발생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대응하는 데 우선 배려했습니다.

토양과 지하수를 사전 예방적으로 관리하는 기조를 유지하면서 구 장항제련소 주변 오염지역 정화를 위한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15쪽부터 17쪽까지 상하수도, 토양지하수 및 수질 분야의 세부 사업 현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8쪽, 폐기물 부분입니다.

동 부분은 금년 대비 15.6%p, 485억 원 증액했는데 주로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위한 투자를 증액한 데 따른 결과입니다.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은 기존 5개 외에 4개의 신규 사업을 추가했으며 재활용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예산을 큰 폭으로 확대했고 재활용 체계를 네거티브로 전환하기 위한 예산도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SOC 투자는 자원회수시설을 중심으로 확대했으나 소각, 매립 등 기존 중점 투자 분야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선진화하고 단독주택 지역이나 농어촌 지역 폐기물 배출 환경을 개선하는 등 편리하고 쾌적한 폐기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9쪽, 20쪽은 폐기물 부분 세부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다음은 21쪽, 대기 부분입니다.

대기 부분 예산은 국민이 체감하는 대기 질을 개선하면서 기후변화시대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금년 대비 26.2%p 증액된 4277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차는 금년 3만 대에서 내년 4만 대로 목표를 늘려 잡았고 특히 환경성이 크게 강화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해 대당 50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급 3000대를 보급하고자 합니다. 전기차는 금년 3000대에서 내년 8000대로 목표를 늘려 잡았고 특히 급속충전기 150대를 신규 설치하는 등 충전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확대할 계획입니다.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대기 질을 개선하기 위해 노후차 조기 폐차 등 오염원을 제거하고 측정망과 예보능력을 강화하는 예산도 확대 반영했습니다.

배출권 거래제에 따른 중소기업의 감축 활동을 확대 지원하고 기후변화 적응 대책도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22쪽은 대기 부분 세부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다음은 23쪽, 자연 부분입니다.

자연 부분은 생태계 보전과 생물 다양성 증진, 대국민 생태서비스 제공 등을 위해 6.3%p 증액된 5608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먼저 습지, 도서, 지질공원 등 생태적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을 지정·관리하고 훼손된 지역을 복원하는 데에 투자를 지속하겠습니다.

또한 자연마당 등 생태 휴식공간을 확충하고 재난 취약지구나 야영장, 대피소 등 탐방시설에 대한 안전투자를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생물산업 소재를 발굴하고 야생생물유전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을 확대하면서 야생동물 보건연구원을 건립하여 AI 등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24, 25쪽은 자연 부분 세부 사업 예산 현황입니다.

다음은 26쪽, 환경 일반 부분입니다.

환경 일반은 환경보건, 환경정책, 국제협력, 환경연구·교육 등의 예산으로 전년 대비 5.4%p 증액된 7593억 원입니다.

환경보건 분야는 세정제, 살균제 등에 대한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시행하고 시장 유통 제품에 대한 수거조사를 실시하는 등 생화학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대폭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한 텐진 사고와 같은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장비 확충, 교육·훈련 등에도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아토피 등 환경성 질환의 원인을 규명하고 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10만 명에 달하는 산모와 어린이에 대한 장기 추적조사를 시행하는 환경보건 출생 코호트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고 층간소음 이웃사이서비스, 석면 슬레이트 제거 등 대국민 환경보건서비스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27쪽, 환경정책 분야입니다.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리는 환경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고 특히 환경산업의 산실이자 해외 진출의 전초기지가 될 실증연구단지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R&D 사업을 효율화한다는 범정부적 기조에 따라 환경 분야 R&D 사업에 대해서도 구조조정을 시행했으나 기후변화 대응, 환경보건 기술, 화학사고 대응기술 등 시급히 추진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확대 편성했습니다.

28쪽입니다.

환경 인허가 체계를 통합화·간소화하기 위한 예산을 확대했으며 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으로서 피해 구제제도 구축 예산도 확대 편성했습니다.

국제협력 분야는 녹색기후기금 사업을 발굴·지원하고 기후변화 국제협상에 적극 참여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을 강화했고 친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개도국 지원 사업도 증액하였습니다.

29쪽부터 34쪽까지 환경 일반 부분 세부 사업 현황은 참고해 주십시오.

그다음의 35쪽부터 37쪽은 2016년 신규사업과 2015년 완료사업 현황입니다. 이 역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6년도 수계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1쪽, 수입계획입니다.

2016년도 수입은 9845억 원으로 전년 대비 298억 원 증가되었습니다. 물이용부담금 수입은 최근 3년간 물사용 추이를 반영 34억 원 감소편성했고, 물이용부담금을 제외한 수입은 집행잔액 회수금 및 여유자금 회수금 증액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332억 원 증가하였습니다.

42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규모는 전년 대비 298억 원 증가한 9845억 원으로 토지매수와 수변녹지조성사업이 230억 원, 기타 수질개선 지원사업과 환경기초 설치사업이 각각 184억 원과 79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여유자금 운용규모와 오염총량관리 사업비는 각각 149억 원과 55억 감소되었습니다.

43쪽부터 46쪽까지 4대장별 기금운용계획안은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7쪽, 2016년도 석면피해구제기금 운용 계획안입니다.

4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분담금 등 자체수입 137억 원, 환특회계 전입금 30억 원, 여유자금 회수금 310억 원 등 총 47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50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총 476억 원으로 사업비 106억 원, 기금운영비 17억 원, 여유자금운용 353억 원 등입니다.

사업비로는 석면피해구제급여 지급에 95억 원, 석면피해신고센터 운영비에 11억 원이 편성되었

고, 기금운영비로 17억 원, 여유자금운용으로 353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1쪽부터 53쪽까지 석면기금 주요사업 내용은 참고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55쪽, 민간자금을 활용하여 빠른 시간 내에 하수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추진하는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의 한도액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하수관거정비 임대형 민자사업, 즉 BTL 한도액안은 2015년 대비 58.4%p 감액된 825억 원입니다. 동 사업비는 부산광역시 북항 재개발 지역의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로 하수관거 68km와 배수설비 1만 4000여 개소의 정비에 총 825억 원이 배정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상청장 나오셔서 기상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존경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김영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6회계연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평소 위원님들께서 기상청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의 미흡한 점을 지적해 주시고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편달을 해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해 기상청은 정책목표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상기후 빅데이터, 기상사업자와 함께하는 기상서비스로 정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별로 분산된 예보기능을 도 단위 거점으로 집중 광역화하여 예보 생산단계의 간소화를 통해 신속한 방재대응체계를 구축하였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역 맞춤형 기상기후 서비스 및 취약계층 대상 기상정보 문자서비스 등 서민 중심의 기상서비스를 한층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기상 분야 공공데이터 개방과 기상기후 빅데이터 융합서비스를 적극 추진하여 기상기후 정보의 활용을 높이고 민관 역할 분담,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 기상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기상기후산업 진흥으로 풍요로운 사회 건설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조기경보서비스 시행, 안개관측망

확충 및 안개특보 시범 운영, 가뭄전망정보 서비스 실시, 상세 기후변화 전망자료 제공 등 국가 위기대응 체계를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정책의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강화하였습니다.

아울러 IPCC 의장 진출과 세계기상기구 집행이사 재진출로 국제기구 내 주도적 역할 수행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기상장비 도입 및 유지보수체계의 개선과 기상 R&D 관리체계의 효율화로 미래사회를 대비한 기상업무 수행기반 구축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6년도 기상청 예산안 주요 편성 방향입니다.

첫째, 기상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공공의 복리 증진을 위해 위험기상과 지진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둘째, 빅데이터를 활용한 기상정보 활용기반 마련 및 기상기업 창업·성장 지원 등을 통한 기상기후산업 진흥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지역별 위험기상에 대한 맞춤형 서비스와 2018평창동계올림픽 등 국가어젠다에 대한 공공서비스 역할 증진을 중심으로 예산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기상청 전 직원은 지속적인 기상기후 서비스 확대를 통해 국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면서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은 58억 원으로 2015년도 세입예산 35억 원에 비해 23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출연금과 민간 대행사업비 예산 증액 등에 따른 정산액 증가분을 반영하였기 때문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은 4051억 원으로 2015년도 세출예산 3856억 원에 비해 5.0% 증가하였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프로그램별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에 89억 원,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에 80억 원 등 기상예보 부문에 181억 원입니다.

둘째, 지상 기상관측에 117억 원, 고층 기상관측에 151억 원, 지진관측에 81억 원 등 기상관측 부문에 758억 원입니다.

셋째,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에 58억 원, 해양기후 정보 생산 및 제공에 111억 원 등 기후변화 과학 부문에 258억 원입니다.

넷째, 기상산업 진흥에 120억 원,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에 38억 원으로 기상서비스 진흥 부문에 157억 원입니다.

다섯째, 선진기상 기술개발 및 기상업무 지원 기술개발과 기상관측 위성 개발 등 기상연구 부문에 1363억 원, 항공기상청 운영을 위한 책임행정기관 부문에 141억 원입니다.

마지막으로 국제협력 49억 원, 교육홍보 39억 원 등 국제협력 교육홍보 부문에 87억 원, 본청 및 소속기관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등 기상행정 지원 부문에 1105억 원입니다.

기상청 필요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상청 소관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기상청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또 있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또 있지요? 예.

○기상청장 고윤화 2016년도 기상청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를 준비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6년도 예산안 개요,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프로그램별 사업내역 순입니다.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7쪽의 2016년도 예산안 개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8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안전한국 실현, 기상산업 진흥 및 공공서비스 역할 강화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위험기상 대응 등 재해로부터 안전한 국가 실현 및 기후변화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 개발 등 14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 1232억 원에서 내년 1384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기상산업 육성과 기상정보 활용기반 마련을 위해 기상산업 활성화 등 8개 사업에 대하여 올해 224억 원에서 내년 242억 원으로, 개도국 기상·기후업무 수행기반 구축·운영 지

원에 올해 24억 원에서 내년 29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방청 공공서비스 역할 증진을 위해 지역 기후정보 생산 및 활용 등 12개 사업에 대해 올해 151억 원에서 내년 181억 원으로 확대하고, 국가어젠다에 대한 공공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2018 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등 5개 사업에 대해 올해 40억 원에서 내년 72억 원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 9쪽입니다.

2016년도 예산 편성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누수율을 차단하기 위해 국립기상과학원의 7개 고유사업을 1개의 사업으로 통합하는 등 15개 세부사업을 5개 세부사업으로 통폐합하였습니다.

다음 10쪽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전부 일반회계로 4051억 원입니다.

인건비는 정원 증가와 호봉 자연승급 및 봉급인상 등으로 인하여 5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지방청 광역화, 수도권기상청 신설에 따른 기관운영비 등으로 인하여 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비는 다목적 기상항공기 도입과 해상부이 구매가 금년 중으로 완료되나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 개발, 2018평창동계올림픽 기상지원, 항공항행기상정보시스템 구축사업 등이 증액되어 13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2015년도 종료사업은 1건이며, 2016년도 신규사업은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14쪽,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세입예산안 규모는 58억 원으로 출연금과 민간 대행사업비 예산 증액에 따른 정산액 증가 등으로 2015년도 대비 23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15쪽, 세출예산안 부분입니다.

2016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4051억 원으로 2015년도 대비 194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감내역과 세출예산안 내역은 아래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19쪽, 프로그램별 사업내역입니다.

기상청 세출예산안은 8개 프로그램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20쪽에서 24쪽까지 기상예보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기상예보 프로그램 부분은 국가태풍센터 운영

12억 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 개발 89억 원, 예보 및 통보체계 개선 80억 원 등 3개 단위사업 예산이 총 181억 원입니다.

다음 25쪽에서 32쪽까지 기상관측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기상관측 프로그램 부분은 지상 기상관측 117억 원, 고층 기상관측 151억 원, 지진관측 81억 원, 기상정보시스템 운영 409억 원 등 4개 단위사업 예산이 총 758억 원입니다.

다음 33쪽에서 43쪽까지 기후변화 과학 프로그램 부분입니다.

기후변화 과학 프로그램 부문은 기후변화 과학정보 생산 및 서비스 58억 원, 기후변화 국제협력 활동 강화 11억 원, 아태 기후정보 서비스 및 연구개발 78억 원, 해양기후 정보 생산 및 제공 111억 원 등 4개 단위사업 예산이 총 258억 원입니다.

다음 44쪽에서 48쪽까지 기상산업 정보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기상산업 정보 프로그램 부문은 기상산업진흥 120억 원, 기후자료 관리 서비스 38억 원 등 2개 단위사업 예산이 총 157억 원입니다.

다음 49쪽에서 59쪽까지 기상연구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기상연구 프로그램 부문은 선진기상 기술개발 120억 원, 기상업무 지원 기술개발 240억 원, 기관관측 위성 개발 782억 원, 기상 See-At 기술개발 221억 원 등 4개 단위사업 예산이 총 1363억 원으로 2015년보다 143억 원이 증가하였고, 그 주요 증가 사유는 정지궤도 기상위성 지상국 개발사업 215억 원이 증가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 60쪽, 책임행정기관 운영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항공기상청을 운영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총 141억 원으로 2015년도 대비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61쪽, 국제협력 교육홍보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국제협력 교육훈련 및 홍보를 위한 예산안으로 총 87억 원으로 2015년도 대비 8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끝으로 62쪽, 기상행정 지원 프로그램 부문입니다.

이 사업은 본청 및 6개 지방청 등 소속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 기본경비, 소속기관·청사

시설개선 등을 지원하는 예산안입니다.

2016년도 예산안은 1105억 원으로 2015년도 대비 69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6년도 기상청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개요를 간략하게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기상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손충덕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 2016년도 환경부 소관 예산안, 기금 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과 기상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요약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경부 소관입니다.

전체적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세입예산안에 있어서 환경개선특별회계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법정부담금 등 자체 세입의 비중을 상향할 필요가 있고 환경개선부담금, 생태계보전협력금 등 6개 법정부담금의 징수 실적도 더 높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둘째, 세출예산안과 관련하여 2016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사업 중에서는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하수처리장 확충사업과 국립공원사업 등은 행정절차 지연, 민원 발생 등으로 인해 집행행률이 연례적으로 낮고 전기자동차 등에 대한 구매보조금 지원 사업은 보급 실적이 계획보다 적어 집행행률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는 심사 과정에서 연내 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집행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에도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부문별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부문 중 토양·지하수 기술사업화 지원 사업은 이와 유사한 내용의 사업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출연사업에도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향후 통합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확충 사업은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안을 조정할 필요가 있고 매년 낮아지고 있는 지자체의 집행행률에 대한 개선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

다음, 수질보전 부문 중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 사업에 있어서는 가축분뇨로 퇴·액비를 만드는 자원화 시설과 에너지를 생산하는 바이오가스화 시설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각각 퇴·액비의 공급 과다와 에너지 생산량 저조라는 문제가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생태하천복원사업은 2011년 이후 매년 지자체 실집행률이 부진한 상황이므로 지자체별 집행 가능성을 면밀히 점검하여 예산안을 조정하고 이와 함께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지역발전특별회계 생활기반계정으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이관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폐기물 부문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선진화 사업입니다.

동 사업은 2015년 현재 서울을 제외한 지자체의 실집행액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2017년 1월 1일부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의 밀폐화가 의무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지자체의 실집행률 제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사업은 일부 음식물처리시설의 경우 민원 발생, 실시설계 지연 등으로 실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사업에 대해서는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만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음, 대기보전 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참여기업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사업은 지원 대상이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이나 동일한 선정 기준을 적용하면 중견기업 위주로 선정될 가능성이 크므로 중소기업이 우선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천연가스자동차 보급을 위해서는 구입보조금을 지원하는 CNG 하이브리드 버스의 경우 보조금 인상계획에 따라 내년에는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일반 버스보다 비싼 차량 비용, 보조금 인상에 따른 지방비 부담 증가 등으로 집행이 부진할 수 있으므로 이를 감안해서 적정한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자연보전 부문 중 습지보호지역 사유지 매입 사업은 토지 소유자들이 감정가격에 대한 불만 등으로 지자체의 매입 추진 절차가 지연되어 연례적으로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최근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환경보호 일반 부문 중에서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협력 사업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를 위한 한·중 기업 간 계약이 아직 체결되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2016년도에는 계약의 조기 추진, 지원 분야 확대 등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개도국 환경개선 마스터플랜 수립 지원 사업은 그동안 22개 국가에 마스터플랜을 수립·제공했으나 우리나라 기업이 진출한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므로 해외 수출지원 성과를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 4대강 수계관리기금 중 수질보전활동 지원 사업은 각 수계에서 활동하는 민간 환경단체의 환경감시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보조금 정산에 과다한 인력과 시간이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 관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도입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 사업은 한강 상류지역의 친환경 청정사업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는 예산안 편성 시 지자체별 성과에 대한 평가를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이를 예산안에 반영하는 제도를 마련하여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 석면피해구제기금의 경우 최근 4년간 기금지출액 대비 여유자금의 비중이 70%로 과다하기 때문에 중장기 기금 지출 소요를 정확히 추계하고 석면피해예방 사업 등의 확대 등을 통해 여유자금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기상청 소관에 대해서 주요 검토 내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먼허, 수수료 세입 중 우리나라 영공을 지나는 민간 항공기에 부과하는 항공기상정보 수수료는 원가 대비 8% 수준으로 저렴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항공기상정보 제공은 민간 항공사에게 혜택을 주는 서비스이므로 정보 제공 비용은 가급적 수수료로 충당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영국 등 선진국에서도 우리나라보다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레윈존데관측망 운영 사업은 최근 레윈존데, 오토존데 및 헬륨가스의 단가가 하락하고 있고 지난 3년간 단가의 과다 계상으로 인해 낙찰차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예산안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차세대 도시농림 융합스마트 기상서비스 개발 사업은 도시 및 농림지역에 대한 맞춤형 기상서비스를 개발하기 위해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에 출연하는 사업으로 논문, 특허, 현업화 등의 실적이 저조하고 자체평가 및 미래창조과학부 평가에서도 여러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사업단의 운영 측면에서도 부적절한 사항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업관리 체계를 개선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4건 검토보고서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영주**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체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방법은 국회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일문일답 방식으로 하겠으며, 첫 번째 질의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7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현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현주 위원** 환경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후변화 대응 국제협력 강화가 환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핵심 사업 중의 하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저희가 그 사업 내역을 봤더니 올해 11월부터 이사회에서 GCF 최초 사업승인 예정되어 있더라고요.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우리나라도 여기 제안했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우리도 남미의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가스를 가지고 발전하는 사업을 제안해 놓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이게 원래 보니까 2016년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GCF 사업 승인될 예정이라고 했는데, 지금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난번에 1차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결정이 된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습니다, GCF 자체에서 회의를 하기 때문이에요.

○**민현주 위원** 이게 우리나라에서 처음 시도하고 있는 GCF 관련 사업인데 보니까 제안서 발굴, 초안 작성, 그러니까 제안서 발굴은 환경부의 주된 업무는 아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환경부뿐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산업부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농림

부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소관 부처별로 아주 당선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런 것을 발굴해 내고 있는데 저희는 우리 수도매립지의 매립가스 가지고 발전하는 사업이 GCF에서도 와 보고 '이것 좋다'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어쨌든 처음 하는 사업 제안서를 구상하는 것이고 아이템도 개발을 해야 되는데 환경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이번에는 앞장서서 나서서 개발을 하고 그 이후에는 컨설팅 작업에 집중하시더라도 환경부가 좀 더 주도적으로 나아가 갈 필요가 있다고 보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 승인될 예정인데 이 예산이 지금 1개 사업에 대한 예산 3억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내년부터 몇 개 사업을 제안할 예정이고 그중에 확정될, 그러니까 우리가 가져올 수 있는 사업의 가능성을 본다면 이 정도 예산과 이 정도 1개 사업 개발이 과연 충분한 것인지, 이미 GCF 이사국까지 다 들어와 있는 상황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관님?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는 최대도 하면 한 4건 정도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12억 원 정도로 확보하면 좋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정부안에서는 3억 원, 1건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면 관련되어서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예산 증액을 통해서 환경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민현주 위원** 두 번째는 환경친화적 경제사회 기반 조성이라는 사업인데, 보니까 이게 영세 중소기업 환경기술 지원 사업이에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민현주 위원** 제가 보니까 이게 지금 중소기업청에 용자사업 관련해서 예산이 편성되어 있기는 한데 이 예산 편성되어 있다는 이유로 그 이외의 다른 예산은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들이 환경규제 강화 때문에 도산하거나 파산한다는 우려가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런 우려들이 경제지 중심으로 나오기는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파산됐는지 이런 것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면 이것 관련해서 영세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부처가 시행하고 있는 환경 규제라든지 잘 이행하고 싶으나 관련해서 담보제공 능력도 없고 그리고 기술을 갖다가 도입할 만한 여력이 안 된다, 그래서 추가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하는데, 이에 대해서 환경부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청하고 저희 환경부가 있는데 저희 것은 금액은 한도가 있지만 무상으로 주거든요. 그런데 중소기업청은 용자를 주다 보니까 그쪽에는 담보 제공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세 기업들이 담보제공 능력이 없어서 환경부 것을 사용하기를 원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재원 한계 때문에 업체당 한 2000만 원 범위 내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면 환경부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정 투입까지 해서 영세 기업을 지원했을 때, 구미 불산 사고라든지 관련되어서 예기치 못한 사건이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것에 대한 확실한 예방책이 될 수 있다고 장관님 평가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영세 기업은 무상으로 지원하면 확실하게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민현주 위원** 관련해서 그러면 한 번 지원해서 계속 지원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일회성 지원으로 인해서 그 기반이 확충되어서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무상지원은 자주 하면 안 될 것 같고요. 한 번 하고 그다음에 또 중소기업청같이 필요하면 용자 방식으로 가야지 계속해서 무상으로 하다 보면 기업의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민현주 위원** 그러면 지금 환경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11억 7300만 원 예산 증액이 된다면 일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구미 불산 사고나 도금업체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관련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라는 데 장관님 동의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원받은 데서는 아마 그런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겁니다.

**○민현주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민현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양창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창영 위원 환경산업체 해외 진출과 관련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난 국감 때 기술원을 상대로 현재 기술원에서 이행하고 있는 환경산업체 해외 진출과 관련해 가지고 경기침체 등으로 해외수출 여건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습니다. 혹시 관련 사항 보고받은 적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기술원에서 서면질의 받고 서면답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국내 환경산업체 해외 진출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시설자금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보는데, 혹시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내년도에 이차보전 예산으로 450억 원 상당의 이차보전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지난번에 제가 지적했듯이 시설자금 지원 사업은 필요하고 또 내년도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소요 예산은 얼마나 필요한지 또 관련 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종합적인 것을 한번 이 자리에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현재 저희가 이차보전 예산으로 13억 원이 반영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 가지고 용자를 받게 되면 아마 450억 원 정도 용자를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지 이것을 한번 저희들이 면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장관께서 관련 규정을 개선하든지, 좌우간 이 부분에 대해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양창영 위원 현재 재외국민, 세계에 흩어져서 살고 있는 한상이나 또 해외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동포들의 네트워크를 활용한다면 환경산업체가 해외 진출할 때 교두보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해외에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분들이 굉장히 귀하고 또 중요한 역할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현재도 스물일곱 분 정도를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장관께서 환경산업체의 해외 진출을 위해서 관련 예산도 좀 확보해 주시고 재외국민들, 해외동포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 종합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도 그런 훌륭한 분들을 가능하면 많이 발굴을 해 가지고 활용할 수 있도록 또 고국의 발전에 기여했다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과 함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다음으로는 학원 석면 문제, 지난번 본 위원이 국감 때 학원 10개 중에 3개는 소규모 학원으로 석면검사조차 받지 못한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기억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기억합니다.

○양창영 위원 학원의 경우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서 다중이용시설에 해당하기 때문에 건축물 연면적이 1000㎡만 석면검사를 받고 있는데요. 전국의 7만 6050개의 학원 중에 따져 보니까 석면조사 대상 학원이 한 310개소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대책 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기억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양창영 위원 그런데 내년도 예산 중에 석면안전관리 강화 항목을 보니까 학원 석면 안전진단 지원이 불과 2억 원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양창영 위원 본 위원은 석면 조사 대상 시설을 전체 학원으로 확대하고, 시설이 크든 작든 전체 학원으로 확대하고 또 지원 사업을 지금보다 더 증액해야 된다고 봅니다. 어린이들 학원 교육에, 이런 인체에 위해가 안 가도록,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정부가 학원을 전체 조사하는 게 확실한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보다도 더 열악한 데가 많이 있습니다, 어린이집같이. 말하자면 학원 중에는 또 돈벌이를 잘하는 데도 있거든요. 그래서 학원의 종류별로, 국가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열악한 학원은 빨리 찾아내서 하고 또 재력이 있을 수 있는 데는 교육부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 가지고 의무화하는 방안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양창영 위원** 학원시설, 좌우간 자라나는 어린 학생들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보는데, 얼마의 예산이 추가로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금 저희가 2억 원은 약 400개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소당 한 500만 원씩인데, 4억 원으로 하면 800개를 할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10억 원만 해도 한 2000개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많이 예산을 확보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 정도로 늘어나기 때문에 좀 감안해 주셔서 심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이 관련 예산을 제대로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해 주시고, 이와 더불어서 학원 인허가 할 때 석면 조사 결과를 첨부하게 한다든가 이런 제도적인 보완책도 같이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 향후 계획을 수립한 게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 것도 지금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라고 교육부 소관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반영하는 방법 등을 교육부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마음껏 공부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께서 어떤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라고 장관님이 의지를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시간이 없어서…… 하나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노인들 관련된 환경보건 서비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는데, 노인 환경보건 서비스 예산에 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노인분들, 어르신 활동공간에 대한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기억합니다.

○**양창영 위원** 그런데 어르신들, 노인분들 활동공간에 대한 내년도 사업예산을 확인해 보니까 관련 예산이 2억인가, 2억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2억 원 반영이 돼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얼마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까? 2억 갖고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가 당초에 7억 원 정

도가 적당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지금 반영은 2억 원이 돼 있습니다.

○**양창영 위원** 지금이라도 사업예산을 좀 더 확보해 가지고 어르신들, 다 모시는 분들, 노인들이 안전한 공간에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관님, 노인복지 관계를 염두에 두고 환경보건 서비스 차원에서 환경보건 예산을 어느 정도 확보하는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종합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관심을 갖고 계신 노인복지시설이 전국에 한 7만 개가 있는데 지금까지 저희가 2억 원 등등 해서 한 450개소 진단에 그쳤습니다. 그런데 내년 중에는 진단을 한 700개소 또 시설을 개선해 주는 것은 한 350개소 해서 7억 원 정도를 저희들이 확보하고자 하는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창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양창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새정치연합의 이석현 위원입니다.

폭스바겐 사태 관련해서 자동차 배출가스 결합 확인검사 등 인증 사후관리 선진화사업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폭스바겐 사태 이후에 우리도 폭스바겐 7개 차종에 대해서 실제 도로검사를 지금 수행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런데 제가 파악을 해 보니까 현재 보유한 장비로는 1개 차종을 조사하는 데 한 일주일가량 걸려요. 그래서 폭스바겐만 봐도 2009년 이후에 판매된 것만 20개 차종이더라고요. 또 계열사인 아우디를 포함하면 28종이나 됩니다.

계산대로 하면 폭스바겐 것만 하는 데 7개월이 걸린다는 얘기가 돼요. 그리고 국내외 경유차 제작사만 20군데에 달하는데 그런 쪽으로 차종을 확대할 경우에는 이게 내년 안에 조사가 완료될지 의문인 그런 상황입니다. 실제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또 현재 보유한 실도로 조건 검사장비가 대형차용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대형차용입니다.

○**이석현 위원** 그러면 주로 검사대상이 돼야 될 승용차를 검사하는 데는 또 한계가 있을 것 아니겠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승용차 자체를 또 개조해야 되기 때문에 차주한테 피해를 주는 문제도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아, 대형차용으로 검사를 하려면 승용차를 뭘 개조를 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석현 위원** 예, 그래서 실험실 내에서만 하던 배출가스 인증시험을 앞으로 실도로 조건에서 할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검사장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중소차형 배출가스 측정장비를 추가로 사야 되겠는데 지금 이 예산안이, 정부 예산안이 확정된 이후에 폭스바겐 사태가 터진 거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검사장비 확충 예산은 예산안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일부 들어 있기는 한데요. 저희가 2017년 9월부터 중소형차도 실도로 주행을 하도록 이미 예정이 돼 있었기 때문에 일부 들어 있기는 한데 이렇게 대대적으로 조사하는 것은 예산안에 안 해 놨습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많이 부족하겠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석현 위원** 그래서 경유차 배출가스가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에 안 좋은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예산을 증액해서 신속히 조사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걸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지적 말씀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26억 원 정도를 정부안에 반영을 해 놨는데 대폭 증액을 한다면 우리가 지체 없이 검사를 함으로써 환경도 지키고 국민 건강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석현 위원** 우리 국민들에게 이게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또 특별히 예결소위에 있는 분들은 유념해서 이런 부분은 좀 증액해 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과징금 문제, 제가 지난번에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낸 건 알고 계시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알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과징금 상한액을 10억으로 해 놓은 것을 100억으로 올려놨지요. 그래서 과징금을 상향해야 되는 거는 첫째로 위반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효과가 있지만 또 하나는 환특회계, 그렇지 않아도 세입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지금 70% 이상을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석현 위원** 그래서 환특회계를…… 그렇지 않아도 돈이 부족한데 75%나 의존하고 있는 걸로 돼 있어요. 그래서 과징금을 높여서, 또 거기서 들어오는 과징금은 환특회계의 세입을 확충하면 이런 환경개선에 또 도움이 될 겁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하는 일이나 경유차를 조기에 폐차시키는 그런 일들에.

그래서 나는 1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하는 게 맞다 생각해서 여러 의원들 의견을 감안해서 이렇게 법안을 내놨습니다. 환경부에서도 큰 관심 가지고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석현 위원** 제가 지난번에, 환경재단이 하는 기후변화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제가 다녀왔기 때문에, 행사에 가서 내가 이 법안 낸 얘기를 했더니 많은 환경단체, 환경운동가들이 다들 이구동성으로 ‘이거 정말 잘했습니다’, ‘100억은 돼야 조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이거 기업들이 어려워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 할 수 있지만 앞에 있는 조건이, 대기환경보전법이 뭐냐 하면 ‘총 판매액의 3% 이내로 물린다. 그런데 그것이 10억을 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판매액의 3%라는 전제하에 지금 100억으로 상한을 올린 거기 때문에, 개정안에, 판매액의 3%면 적자 나는 건 아닐 겁니다. 이익이 3% 이상이야 나지 않겠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환경부가 걱정을 너무 많이 안 해도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국토부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도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다행입니다. 그렇게 해서…… 혹시 국토부가 반대하더라도 잘 밀어붙여서 하시기 바라는데, 국토부도 별 반대 안 하는 모양이구먼요.

다음은 상수도 관련해서…… 상수도시설, 지금 정수장하고 상수도 놓는 건 일체 국비로 예산에 안 들어가 있네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석현 위원** 기재부가 반대했겠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기재부가 지방공기업법이나 또 보조금 관리법 이런 쪽에서 지방의 고유 책무다, 고유 사무다……

○**이석현 위원** 고유 사무다 그랬지요, 그렇게 한 걸로 저도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실은 상수도가 굉장히 많이 노후화돼서 부실부실하고 국민들이 참 안 좋은 물 먹게 되고, 정수장도 지난번에 여러 군데 사업 대상으로 선정했던데 하나도 예산을 안 넣었던데, 지금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걸 이렇게만 꼭…… 이게 1조 원이 넘어서 지자체가 충당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요. 재정 부채가 지자체가 1조 원이 넘어 가지고 이것을 감당할 재력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이런 큰돈들을.

그런데 정부가 그것 핑계만 댈 일은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법을 봤더니 어떤 게 있느냐 하면 수도법 2조에 보면 ‘국가’는 모든 국민이 질 좋은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수도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리고 모든 국민에 대한 수도물의 보편적 공급에 기여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라는 건 정부가 거기서 빠지는 얘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정부가 책임이 없지 않은 겁니다. 꼭 지자체의 고유업무다라고만 미룰 일은 아니고 지원을 해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부터라도 이것 신경 많이 쓰십시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우선 군 단위가 재정 자립도가 한 12%밖에 안 되는데 그거는 군청 공무원 인건비도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군 단위부터 우선 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석현 위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십시오.

1분을 더 써도 안 되나요? 되나요?

○**위원장 김영주** 예, 가능합니다. 말씀하십시오.

○**이석현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립공원 재난안전 관련해서 국정감사 때 제가 지적을 했어요. 예보·경보시설 전체 377개소 중에서 절반이 넘는 224개소가 내구연한을 전부 넘겼더라, 기상정보 또 자연재난 발생에 대비해서 신속히 상황 전파하는 그런 모든 시설들이 그렇게 돼 있더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을 보니까 국립공원 재난예보경보시스템 운영 예산이 노후시설 교체비용이 25억밖에 안 들어 있어요. 이거는 자동우량경보시설 57대하고 재해문자전광판 4대, 자동기상관측장치 5대 교체를 하는 정도의 금액입니다.

그런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여전히 자동우량경보시설 56대, 재해문자전광판 55대 그리고 자동기상관측장치 7대를 추가로 교체할 필요가 있는 그런 노후화된 거였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이 38억입니다. 이것을 탐방객의 안전을 위해서 증액할 필요가 있다, 조기 교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신설이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기존 시설의 경우에는 내구연수라는 것이 상태가 좋으면 계속 써도 된다, 상태가 나쁘면 바꿔야 된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별 시설별로 성능을 파악해 가지고 교체 여부를 결정해야 되는데, 일단 많이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석현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자스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자스민 위원** 장관님, 제가 준비한 질문 중에 들어가지는 않는데, 일단 수석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를 보니까 환경부 일반 부문 중에서 한중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화 협력사업이 중국과 아직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않고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맞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현재까지 계약 체결은 안 되어 있지만 금년 안에 다 계약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꼭 이것을 서둘러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신을 보면 말 그대로 대기오염으로 인해 죽는 사람 중에 40%가 중국에서 죽었고 베이징 등 중국 대도시의 대기오염은 이미 악명이 높고요. 인도에서도 그런 문제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 데요.

제가 엇그저께 말레이시아에 갔다 왔거든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한 달 반 넘게 해를 못 보고 있다고 합니다. 헤이지(hazy)가 굉장히 심해 가지고 잠깐 나와도, 저도 상태

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잠깐 나왔는데 막 기침을 하고 가래가 생기고 얼굴 가렵고 하는 그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아시다시피 지구의 공기는 순환하기 때문에 한 곳에서 발생한 대기오염은 분명히 다른 곳에서 발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전문가들 말씀을 들어보면 중국으로부터 대기오염은, 특히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 건너오고 난 후에는 훨씬 더 유해한 그런 수준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문제가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이거는 빨리 체결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빨리 이렇게 추진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유엔에서도 얘기를 하지만 대기오염 문제는 당사자 국가를 넘어서 인접 국가와 협력이 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국가간의 긴밀한 공조를 많이 요구를 했었고 우리나라도 하루빨리 이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환경기술 실증화 협력사업도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걱정해 주신 대로 중국도 관심이 굉장히 큼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가장 가까운 산둥성에서 적극적으로 나오고 있어 가지고 아마 11월 중에는 금년 예산에 대한 계약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지원을 해 주시면 차질 없이…… 시간은 좀, 왜냐하면 저쪽하고 서로 타협을 해야 되니까 계약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리지만 내년도 예산도 틀림없이 집행이 가능할 겁니다.

**○이자스민 위원** 사실상 우리나라에서 느끼는 그런 문제하고 해외에 나가 보니까, 그렇게 피해를 받는 그런 나라에 나가다 보니까 훨씬 더 이해가 빨리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예산을 어떻게 해서 잘 확보를 하셔서 꼭 빨리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제가 국정감사 당시에 지적을 했듯 저소득층 등 우리 사회의 취약계층에 계신 많은 분들이 열악한 주거환경에 거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도 취약계층 거주공간에 대해서 생활환경 유해인자를 진단하고 환경성질환의 피해를 줄이는 것은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2013년 한 해 동안 일반 건강보험 대상

자는 전체의 3.6%가 천식으로 진료를 받은 반면에 의료급여를 받는 사회취약계층의 경우는 6%로 환경성질환에 보다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내년 정부 예산을 살펴보니 올해 예산보다 14.3% 삭감이 되어 있고 정부의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환경성질환 예방 의지에 의심의 눈초리를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전국의 사회취약계층은 370만 가구에 이르고 이 중 1%에 해당되는 3만 7000 가구는 생활환경진단이 시급하다고 환경부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때문에 3만 7000 가구에 대해서 원활한 생활환경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증액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말씀하신 대로 이 3만 7000 가구에 대해서 진단을, 저희가 목표는 2025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내년도에 지금 정부안보다 4억 5000 정도 더 늘어나야만 그런 일정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하나 또, 지난번 국정감사 때도, 현재 우리나라의 가뭄은 심각한 상태인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물절약 정책의 필요성을 말씀드렸고 장관님께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 동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되는 것은 워낙 예산이 적고 홍보를 위한 그런 부분밖에, 5억밖에 안 되는 것 맞나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이렇게 물절약 정책 관련 예산은 계속해서 매년 감소를 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할 수 있는 것은 이 예산을 가지고…… 홍보와 교육을 통한 국민들의 의식 개선도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데, 말씀 그대로 그때 당시 환경부 발표를 보니까 국민 한 사람이 하루 10% 물을 절약하면 2.5억 t이 담긴 팔당호 2개 분량을 아낄 수 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거는 5억밖에 안 돼 가지고 홍보사업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워낙 적은 예산을 갖고 하다 보니까 사업 진행에 한계가 있고 결국은 효과적인 그런 사업 발굴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적하신 대로 내년도 예산안이 채 5억 원이 안 되는 예산이 홍보예산으

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리플릿 한두 종류 만들면 끝나는 예산인데, 요즘 홍보 효과가 좋은 것이 영상이거든요. 그래서 영상으로 하려면 한 5, 6배 정도 더 예산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자스민 위원** 아무래도 효과적인…… 예산은 5억밖에 없어 가지고 이것밖에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효과적인 그런 홍보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발굴을 하셔서 그것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예산을 더 확보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좀 더 좋은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그리고 지난 감사 때도 폭스바겐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차종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조사 대상을 확대해서 실도로에서 배출 가스 시험을 했을 경우 현재의 보유 장비 수로는 수년이 걸릴 수 있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이 얘기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하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사실 전수조사를 할 필요는 없는데 지금 저런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수요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계산했던 것보다 몇 대 더 확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이자스민 위원** 제가 1분 내에 마무리하겠습니다.

특히 대형차용으로 폭스바겐사의 임의설정 차량 시험에는 장비가 커서 설치 등에 있어서 적합하지 않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때문에 이 조사 대상 확대를 고려한 원활한 도로 테스트, 그리고 문제가 되고 있는 경유 승용차에 적합한 장비 구매를 위한 예산 지원을, 우선적으로 증액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원활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예산 증액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부분 꼭 추진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들이 81억 원 정도 더 증액이 되면 그런 수요를 잘 꺼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자스민 위원** 앞으로 우리도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런 기술력을 확보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런 장비를 조금 더 빨리,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빨리 해결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면 발견할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자스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장하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하나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의원 장하나입니다.

제가 2012년 6월 28일 보도자료 이렇게 보니까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당시의 행정안전부,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우리 환경부가 어린이 활동공간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했다 해서 계속 그 사업들이 진행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러한 내용 알고 계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기억하고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신가요?

여기 보면 또 환경부 주관 환경안전진단·개선 사업을 추진해서 위험시설의 보수·보강사업 및 놀이시설 개선, 마감재로 교체 등 시설개선사업도 강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관련된 예산을 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린이 활동공간 진단사업 말고 개선사업 보니까 내년에 100개소에 600만 원씩 6억 원, 그리고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인증사업이 100개소에 100만 원씩 1억 원, 그리고 영세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하고 개선사업인데 200개소에 100만 원씩 2억 원 해서 이것만 합쳐 봐도 9억 원 정도, 그래서 이게 강화해 나갈 것이다, 이제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해서 범부처가 이러한 노력을 한다고 대대적으로 한 것에 비해서는 너무 미약한 수치입니다.

그리고 실제 어린이집, 유치원의 전체 개소가 거의 5만 2000여 곳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100개소, 200개소 해서 언제 목적을 달성할지 너무 요원합니다.

그래서 일단 말씀드리는 것은 환경개선이 1개소에 60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일선 어린이집이라든가 원장님들의 얘기를 들어 봐서는 600만 원이 환경개선 예산으로도 부족하다라는 얘기를 들어서 이 600만 원 산출을 어떤 식으로 하셨는지 일단 자료를 좀 주십시오. 현장에서는 2000만 원 정도까지 얘기가 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은 저희가 일단 확인하고요.

그런데 환경개선사업을 100개소로 지금 정해 놓으셨는데, 저는 여기서는 비약적으로 1000개소를 해도 모자라다, 그러니까 60억 원으로 과감히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환경인증사업은 시범사업이 아마 400개소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거 100개소로 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범사업 했던 400개소 유지하는 것 정도도 저는 최소한이라고 보여지고요.

그런데 인증 대상이 되는 어린이집, 유치원 개소에 비해서는 저는 한 1000개소로 늘려서 여기에도 10억 원 정도로 증액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특히 영세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진단 100만 원씩 200개소 2억 원 해 놓은 부분도 이것은 한 4000개소로 늘려서 40억 정도, 이거 다 해도 한 110억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저는 범부처가 이렇게 같이 협력하고 국민들에게 아이들 위해서 최선 다한다 약속하신 만큼 제대로 된 예산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1억, 2억 가지고 개선했다고 나중에 환경부가 얘기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부분도 저희 의원실로 답변을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작년에 당초에 환경안전진단을 한 3000개소 정도 한다고 예산이 책정됐을 텐데 예산자료집 보니까 작년에는 1만 5000개소를 진단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출받은 비용 상세목록을 봐서도 어떻게 갑자기 5배수 이상 진단을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것은 일단 저희 의원실로 설명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장관님, 이렇게 제가 증액 요구를 갑자기 드렸는데 혹시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도 절대적으로 적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심의과정에서 저희들 고충 말씀드리고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같이 노력을 해 봤으면, 너무 생각이 듭니다.

환경부가 1억, 2억 가지고 100개소씩 이렇게, 어린이집이 수만 개인데 언제 다 하겠습니까?

또 하나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관련된 예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소위 때 차관님하고 이 부분 토론을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당초에 20억의 연구개발

예산이 있었고, 그런데 20억을 전액 삭감하는 대신 113억의 설계비를 증액해 달라는 요구가 갑작스럽게 있었습니다.

아니지요. 토론과정에서 갑자기 113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연구개발비 20억은 전액 삭감하고 설계비 113억 중에 100억만 증액시킨 것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그렇게 사실 별로 좋은 과정도 아니고 설명도 부족했고, 그러한 100억 예산 중에 현재 11억만 집행됐다고 하고 있고요, 알아본바 내년 3월에 턴키방식으로 낙찰자가 선정되어야 예산 집행이 가능한 것이었는데 그렇게 무리하게 작년 예산을 가져가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고, 국회에서 예산 심의 저희가 하고 있기는 하지만 환경부가 이것은 예산 심의하고 있는 위원들에게도 적절한 태도도 아니었고 이런 일이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또 올해 예산을 얼마 지금 예산안을 잡아오셨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1036억 원 가까이 됩니다.

○**장하나 위원** 그렇지요?

제가 한 개 궁금합니다. 그때도 제가 질문을 드렸었고 궁금해 했는데, 물산업 클러스터 이 산업의 핵심 콘텐츠가 뭐니까? 뭘 하는 것이지요?

물산업 클러스터라고 하면 많은 의원 분들과 국민들께서도 아직 이해가 높지 않은데, 핵심사업이 뭐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핵심사업은 여기서 물산업 기술을 개발하면 그것을 실증을 하는 시설이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실증한 다음에 그것이 성공하면 그게 대외적으로, 레퍼런스(reference)라고 그러는데, 와서 한번 실제 보고……

○**장하나 위원** 실증단지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게 들어가 있습니다.

○**장하나 위원** 그러면 물산업기술이 개발되고, 실증단지라고 하면 어느 정도 개발된 기술 갖고 추진할 텐데 어떤 기술을 저희가……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

마무리하겠습니다.

물산업기술 개발도 아직 된 게 없고, 이 단지에서 기술개발과 실증까지 다 미래에 진행될 사업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정수장이다 그러면 정수장

에 정수약품이 있지 않겠습니까? 응집제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좋은 것이 개발됐다 그러면 지금 쓰는 것하고 이것하고 거기서 동시에 걸어 가지고 효과를 볼 수도 있고요, 또 예를 들면 하수처리다 그러면 하수처리 때 폭기를 해 주게 되는데 폭기설비를 효율이 좋은 것을 개발했다 그러면……

○**장하나 위원** 그래서 제가 궁금했던 것은, 계속 ‘개발되면’, ‘개발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이 단지에서 당장 실증하고 와서 체험하거나 실험해 볼 수 있는 기술들도 아직 개발되지는 않은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제가 궁금한 게 물 관련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물산업 클러스터 수요조사를 했다거나 단지가 만들어지면 어떤 기업들이 참여할지 그런 수요조사는 된 바 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수요조사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은 데가 관심을 갖고 있고요.

○**장하나 위원** 일단 수요조사 한 결과를 저희를 주시면 어떤 기업들이, 정말 이 단지과 관련이 있는 기업들이 왔는지 볼 것이고요. 지난 예산 때 절차도 내용도 부실했는데 100억 가져가셔서 11억, 그러니까 못 쓴 예산 89억 원도 문제지만 그런데도 또 무차별적으로 1000억 이상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유심히 볼 겁니다.

오히려 물산업 클러스터는 콘텐츠도 불분명한데, 이후에 ‘4대강 사업 등 망가진 수생태 복원하는 이런 내용도 물산업 클러스터에서 연구해라, 그런 내용을 주 핵심 콘텐츠로 가져가라’ 이렇게 한번 제안도 드려 보고요.

오히려 4대강 유역의 거점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해서 우리 국토나 망가진 4대강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이 클러스터에서 해 보는 제안도 한번 드립니다.

수요조사 내용을 꼭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알겠습니다.

○**장하나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장하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朱永順 委員** 주영순 위원입니다.

장관님, 도서지역 주민들의 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97년부터 전국 약 20개 시군에 101개소의 해수담수화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렇

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해수담수화시설 계획은 제가 지금 숫자는 안 갖고 있는데, 지금 운영 중인 것은 한 83개소가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이 시설들이 현재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도 인천 섬지역에 가 봤는데, 담수화시설을 1년 내내 쓰면 성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풍부한 시기에는 이것을 안 쓰고 세워 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워 놨을 때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저도 신안군 낙도, 여러 곳을 최근에 돌아봤거든요. 담수화시설들이 거의 가동을 안 하고 있는 시설들이 약 18개나 되네요.

이렇게 담수화시설이 제대로 가동되지 않는 이유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원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원인도 있겠지요. 물론 비싼 생산원가, 해수담수화시설의 생산원가가 지방상수도에 비해서 약 4배 정도 비싼 것 같습니다.

이토록 담수화시설의 생산단가가 높은 이유는 73%가 유지보수비와 인건비였습니다. 따라서 유지보수 문제를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데, 현재 시설의 유지보수 주체는 어디인지 아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일선 지자체가……

○**朱永順 委員** 지자체가 하고 있는데 각 부락 이장들한테 맡겨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관리도 안 되고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비용만 과다하게 지출되고 유지보수도 제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생산비용의 25%를 차지하는 전 기료가 문제입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저효율의 전기장비들이 설치되어 있어서 생산단가가 이렇게 비싸게 나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을 비용을 줄이고 섬 주민들에게 좀 더 싼 가격으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R&D 예산을 기재부에 신청했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기술원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신청은 이것만 따로 떼어서 하지는 않고 그런 내용 속에 포괄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물론 시급성을 모두 인지하고서도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 예산 신청을 안 한 이유는 타 사업에 비해서 시급성이 떨어진다고 판

단해서입니까, 아니면 환경부 예산 실링이 부족하다 보니까 국회에서 그 역할을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실링이 저희들이 압박받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결국은 멤브레인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하는 것인데 우리 기술 수준에서 멤브레인을 기존 일본이나 이런 데서 나온 것보다 성능이 좋은 것을 개발할 가능성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초연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기초연구 해서 탄탄해졌을 때 실용화 사업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기초연구가 아직 부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朱永順 委員** 해수담수화시설은 도서지역 주민들의 생명수를 공급하는 매우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됩니다.

해수담수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약 50억 원가량의 R&D 예산이 시급하고 아주 절실합니다. 늦었습니다마는 주무부처에서 적극적으로 나서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적극적으로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물산업 클러스터, 대구 이쪽에서 활성화되면 연구가 될 수 있고요, 또 이와는 별도로 금년에 연구개발 예산으로 상주에 멤브레인 연구 타당성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타당성조사 결과가 좋게 나오면 아마 그쪽에서 집약적으로 이 부분이 될 것입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은 노후상수관로 개량사업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장관님도 아시다시피 약 20년 이상 된 노후관로가 전국적으로 30% 이상 됩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30% 넘습니다.

○**朱永順 委員** 작년 재작년 제가 2년간에 걸쳐서 얘기를 해서, 아주 강력히 이것을 주장해 가지고 20억 원의 예산을 가지고 실태를 한번 전국적으로 파악해서 정말 어려운 지자체부터 우선적으로 지원하자 이렇게 해서 지원했었는데 아직까지도 최종보고서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왜냐하면 그게 금년 예산이기 때문에, 시간이 짧을수록 조사가 부실해집니다. 그래서 시간을 충분히 주다 보니까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우선 환노위 소위에서 논의하겠지만 내년에 필요한 134억 원의 예산을 환노위에서 일단 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도…… 필요합니다.

○**朱永順 委員** 예결위에서 논의하기 전까지 최종보고서가 나와야 그것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예산당국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관께서 최종보고서를 그때까지 완료해야 하고 그게 여의치 않으면 중간보고서라도 위원님들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중간보고서 형태라도 하여튼 저희들이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朱永順 委員** 특히 전남은 서울에 비해 누수율이 8배나 높고 이로 인해 수도요금이 44%나 더 비쌉니다. 그래서 상수도 개량이 아주 시급한 실정입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이와 같은 현실을 잘 반영해 열악한 지자체, 아까 장관께서 말씀하셨지만 열악한 지자체를 우선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산 반영되면 취약한 군단위들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朱永順 委員** 다음은 석면슬레이트 개량사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2011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점차 지원 가구수와 지원액이 늘어가면서 개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마는 중도 포기자수가 지난해 약 6000명에 달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렇게 중도 포기자가 많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난해 2014년도에는 지원율이 저희가 40%에서 60%로 올라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율이 낮다 보니까 포기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지원율을 높여 가지고 작년에는 오히려 초과 달성한 상태로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朱永順 委員** 물론 그 철거, 지붕개량비가 따로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영세한 가구들에서는 이게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붕개량에 필요한 약 500만 원이나 드는 공사비용이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기피를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형편이 어려운 분들이 많은 전남도

의 경우 사회취약계층이 슬레이트 지붕개량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장성군의 경우 교체 대상자의 92%가 사회취약계층입니다, 92%가. 따라서 관련 예산을 새롭게 편성하시고 사회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지원대상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난해부터 철거비의 70%를 국고로 지원하고 또 지방비로 70% 지원하다 보니까 이제 140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0%는 사실상 개량비를 지원한 형태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계획을 처음으로 초과 달성했습니다. 지금은 그래도 집을, 석면을 제거하려고 하는 가구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예산 총액이 좀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가능하면 최대한 넓히고, 그다음에 확보된 예산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취약계층에 우선적으로 될 수 있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영주** 주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정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애 위원** 환경부장관님,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보조금 지원사업이 올해 실적만 보면 목표가 3만 대인데 3만 대 같으면 이게 9월 말 현재로는 최소한 3분기는 지났으니까 한 2만 대는 하셔야 되거든요.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정애 위원** 그런데 최소한 2만 대는 돼야 되는데 9월 말 현재 1만 대 정도밖에 안 돼서 올해 보급 실적 자체가 목표에는 못 미칠 것 같은데 내년도 예산을 많이 잡아 놓으셨습니까, 한 4만 대 이상으로.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소위에서 이 내용은 구체적으로 판단을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만……

○**환경부장관 윤성규** 금년에는 우선 차종이 네 가지 차종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차종이 빈약하다 보니까 소비자가 선택의 폭이 좁아서 그런 것 같고요. 내년에는 그게 한 7개 차종으로 늘어납니다. 그래서 차종이 이렇게 늘어나면 매력 있는 차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지기 때문에 충분히 4만 대는 소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우리 생각은 그런데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게 실지 지원사업이 그렇게 좀 되거든

요. 그래서 이것은 소위에서 구체적으로 그것 관련해서 한번 자료도 좀 주시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러시고 이게 저희 환특이 아니고요, 예특입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이것을 도와주시면 좀……

○**한정애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특인데 이 사업이 애초에 사실은 정부가 2015년부터 시행해야 할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을 2020년으로 뒤로 빼면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런 부분도 좀 있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을 빼면서 온실가스 기준치 강제성 있는 것을……

○**한정애 위원** 온실가스는 줄이기는 줄여야 되고 하니까 예특에서 저희가 어쨌든 예산을 좀 받아서 하는데 그래도 실적은 실적이고, 아니면 적극적으로 홍보가 좀 되든지 또 산자부가 더 열심히 한다든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지는 않고요. 아무튼 저희도 고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정애 위원** 그리고 기상청장님!

○**기상청장 고윤화** 예.

○**한정애 위원** 국감 때부터 계속 하고 있는데, 차세대도시농림융합기상사업단.

제가 우리 수석전문위원께서도 해 주신 사업계획안 이렇게 보면 전체적으로 기술개발이 2014년 작년까지 끝났어야 되고 올해부터 17년까지 한 3년 동안은 실질적으로 그것을 테스트 하는 게 돼야 되는데 시범운영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가면 17년 이후에 실제 이게 서비스 제공하는 것이 과연 되겠는가라는 좀 의심이라고 그래야 되나, 의혹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 거의 불가능할 것 같다는 생각이……

○**기상청장 고윤화** 이런 사정도 조금 있습니다. 2012년부터 14년 기간이 1단계 사업인데 1단계 사업 중에서 원래 예타 기간 중에는 전체 예산의 50%를 갖다가 투자해서 인프라가 갖춰져야 되거든요. 관측망이라든지 정보플랫폼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그 액수 대비해서 3분의 1 정도밖에 투자가 안 된 상태입니다.

○**한정애 위원** 투자는 안 되는데 실지 예산을 쥐도 잘 쓰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그러니까 그게 더 악순환이 돼 가고요, 오히려 예산이 너무 적다 보니까

쫓기기는 쫓기고요. 또 상위평가 받고 뭐 이렇게 하는데……

○**한정애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게요,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고 기술개발을 하고 하려면 결국은 사람이 하는 건데 기계가 하는 건 아니고, 그게 자체적으로 도농사업단에 연구원이 없으면 이게 외부에 어쨌든 위탁연구과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해결을 하실 텐데 기본적으로 여기는 사람이 정원도 못 채우고 있습니다.

정원 60명 줬는데 39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 그중에서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한 15명 정도 빠지고 나면 실지 연구업무에 종사하시는 분은 한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상황인데 연구를 할 기본적인 구조를 갖고 있지 아니하고 예산을 달라고 하는 것도 문제이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인건비를 다 쓰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기상청장 고윤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구조를 제대로 살펴 가지고……

○**한정애 위원** 기본적으로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 연구를 할 수 있을 만한 연구인력들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기상청장 고윤화** 좀 부족합니다. 부족하고……

○**한정애 위원** 애초부터 무리하게 사실은 1km 곱하기 1km 이것 굉장히 미기상학적인 건데 이것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논쟁 많았는데, 다른 나라에도 잘 안 하고 있는 것 해 보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것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인력들이 없는 거지요. 사람을 구해도 잘 안 구해지고 하는……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제대로 살펴보고 전체 사업계획을 지금 보려고 그러합니다. 전체 사업계획에서 좀 조정할 부분은 조정하고 진짜 서비스가 제대로 될 수 있는 똑똑한 것으로만 골라 가지고 추진하는 좀 전략적인 어프로치(approach)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방금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는데요. WISE 거기에 보면 2014년 시범운영을 위해서 해당 모델팀은 지금 야근 중이라고 하는데 이것 2013년 얘기거든요. 2013년에서 다 서 있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상당 부분……

○**한정애 위원** 그러니까 2013년에 아시안게임

할 때 제공했던 것 그것 외에는 어떻게 테스트를 하거나 한 게 없어요. 2014년에는 사실은 그게 곳곳에 도시는 도시대로 농촌은 농촌대로 좀 깔려서 테스트를 해서 모델을 구축하고 하는 것들이 서비스가 좀 시험데이터를 생산을 해서 다시 보완할 것 보완하고 해서 17년부터는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되도록 해야 되는데 그게 전혀 진행이 안 되고 있어서 청장님께서 아무튼 도농사업단 관련해서는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고윤화** 철저하게 검토해서 재정비해서 당초의 목적에 근접할 수 있는 수준으로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기상청장 고윤화**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정애 위원** 아무튼 세부적으로 예산심의 할 때 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한정애 위원** 그리고 아까 존경하는 우리 장하나 위원님께서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요.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하는 게 너무 속도전인 것 같다는 느낌은 좀 들거든요.

지금 2016년 예산 1000억 좀 넘게 요구를 해 놓으셨는데 올해 예산도 거의 다 못 쓰셨고, 내용은 좋습니다만 너무 욕심을 내셔서 이렇게 2016년 예산을 요구를 해 놓으신 것 같아서 이것도 일단 저희가 예산 세부적으로 심의를 좀 할 때 실지 가능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매입비 같은 경우에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하면 그것은 매입비니까 가능할 수는 있겠는데 그것 외에 시설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진행속도에 맞게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런 것 감안해서 예산을 조금 조절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은 충분히 반 가능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굉장히 넓은 데거든요.

○**한정애 위원** 대통령님의 공약이라서 빨리 해야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넓은 데인데 인천에 저희가 환경실증단지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골조만 올라가고 있는데 이것도 골조비만 들어가 있거든요. 골조를 하고 있는데 인천은 1만 평방미터입니다. 1만 평방미터짜리를 한 층 올리는데 한 달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기는 여러 군데에 분산돼 있거든요. 분산돼 있으면서 하기 때문에 서로 간섭을 안 하고 이렇게 하니까 충분히 집행이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한정애 위원** 시설 부담이 이게 가능하다는 거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정애 위원** 일단 그것도 그러면 세부적으로 저희가 소위에서 논의할 때 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한정애 위원** 그리고 수도권 대기개선 추진 관련해서 제가 이번에 국감 때 그냥 비산먼지 플러스 도로에서 재비산 되는 것들 특히 공사장 주변에 이게 좀 큰 문제가 있는데, 오늘 예산 설명하실 때도 보면 대기 부문에 측정망 및 예보에서 21쪽에 ‘도로분진 제거 등 미세먼지 대책 강화’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의 재비산먼지 저감 등 수도권 대기질 개선 계속 하시겠다고는 했는데 실지 도로의 재비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러니까 어차피 비산되는 것 더하기 재비산 되는 것까지 다 사실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지 도로가의 공사장 주변 인근도로에서의 재비산먼지에 관련해서 이동측정시스템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도록, 그래야지만 사실은 그 인근에 있는 공사장에도 저희가 이용하시는 분 줄 수 있고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예산 반영 이게 좀 필요하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저희가 환경부는 예산만 지원 하니까 그러는데 실지 도로 재비산먼지 대책으로는 살수차량은 별로 의미가 없더라고요. 비산을 떨어뜨리는 데는 괜찮지만 그다음에 재비산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살수차보다는 분진흡입차 위주로 이게 차량이 구매가 되고 배치가 될 필요가 있는데 지자체에 맡겨 두다 보니까 그냥 별 그런 것 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해당 지자체에 맞게끔 차량들이 지원될 수 있게끔 그런 권고라 그러나요, 이런 것들이 같이 병행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어느 정도 재비산이 되느냐 이것을 저희가 전문

적인 그 차량을 구입을 해 가지고 개조를 해서 측정을 해서 결과를 그 시·도에다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바퀴 부분에다가 흡입구를 하나 두고 또 천정 지붕 위에다가 흡입구를 뒤 가지고 양쪽의 차이가 결국은 재비산이거든요, PM 2.5.

그렇게 측정하는 장비차량을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면서 그 결과를 시·도에 알려주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시·도에서 살수차를 한다든지 아니면 진공흡입차를 가지고 도로를 흡입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국고보조사업으로 하고 있는데 더욱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한정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한정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봉홍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봉홍 위원** 장관님 오늘 설명하신 보고서 21페이지 친환경차 보급 확대의 맨 마지막에 하이브리드하고 전기차, 수소차가 있는데 2015년 66대가 2016년에 71대로 돼 있는데 확인 좀 한번 해 주세요. 이것 71대를 말씀하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22쪽?

○**최봉홍 위원** 21쪽 대기 부문에 1번 ‘친환경차 보급 확대’ 해 가지고 거기 마지막에 하이브리드, 전기차, 그다음에 수소차.

수소차 71대라는 것은……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맞습니다.

○**최봉홍 위원** 전 국민이 사면 다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게 지금 정말 아주 초기 단계 보급하는 겁니다.

○**최봉홍 위원** 작년엔 66대이고 금년에 71대……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전기차 지금 현대에서 나온 투싼 그것을 말하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게 그것 아니고요, 수소 연료전지차입니다. 그래서 수소를……

○**최봉홍 위원** 투싼이 지금 한 1000대쯤 국내에 팔렸습니다. 시가가 8333만 원 해 가지고 비싼데 이것을 지방자치단체가 사면 6000만 원씩 보조해주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수소차는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요.

제가 지금 담당 국장한테 확인한 바로는 수소

연료전지차는 개인한테는 아직 안 팔고 있는 것으로 알고요.

○**최봉홍 위원** 안 팔고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그러면 이것 어디다 지원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71대는 지자체에다가 지원하는 겁니다.

○**최봉홍 위원** 지자체에다 지원해 줍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최봉홍 위원** 이것 지금 연구 중인 차인데 국민들은 안 해 주고, 이것 언제 하고 좀 이것 이해가 안 가는 점 안 있습니까? 확인차 여쭙 봤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말하자면 아직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완성……

○**최봉홍 위원** 현재 한 1만 대 나갔습니다. 83년도부터 시험용으로도 나가고 연구소에 나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됐습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노후 지방상수도, 우리나라 국민들 98%가 수도물 먹습니다. 홍보 면에서는 아주 멋지게 돼 있습니다만 누수율이 현재 20%이고 여러 위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20년 넘는 곳이 거의 3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상수도는 31%입니다.

○**최봉홍 위원** 국민 건강에 제일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이 물인데 이것은 지방상수도 사업이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업이고 국가는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기술적 지원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 전년 대비 76억 원이 감소했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감소된 이유가 환경부가 평소에 국민들한테 홍보를 했다면 정치를 하시는 분들이나 지방자치단체나 국민들이 이 물의 중요성을 알아 가지고 이런 것은 빨리빨리 예산 증액을 해 주지 싶은데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산당국도 이것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런데 지자체의 고유 책무고 하수도하고 달리 이것은 자기 지역에서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수도는 자기 지역이 아니라 밑에서 보기 때문에 하수도는 지자체가 등한시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하수도는 지원해 주면서 상수도는 지금 첫발 들여놓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최봉홍 위원** 제일 큰 문제가 우리가 물을 먹으면서 생산된 원가 이상을 줘야 되는데 원가 이하로 주고 있다 아닙니까? 국민들이 물 먹는 것이 국가가 드는 비용에 비해 가지고 아주 싼 값에 먹는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국민들한테 알려 줘야 국민들도 같이 동참해 가지고 ‘아,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할 건데, 지금 전 국민이 전 부 생수 먹고 있는 판에 상하수도 오염이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정수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시골에는 전부 모래만 넣어 가지고 전용 그것 정수해 가지고 정수가 됩니까?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에 이 문제는 첫째, 누수율을 막기 위해서도 전부 고쳐야 되고, 지방자치체에 맡겨 놓으면 지방자치체가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봅니다.

이번에도 삼천몇백 억을 넣었는데 기재부에서 반대를 했는데 장관님께서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물 값을 올리는 방향으로 하든지 그다음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해서 받든지, 안 되면 태백처럼 시범지역이라도 정해 가지고 각 지방자치단체 한두 군데씩 공사를 해 가지고 도민들한테 홍보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방법으로 인용해 주시고 이번 예산 확보하는 데 각별하게 신경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감사합니다.

하여튼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이 부분 최대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리고 작년도 국감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국립공원 산악지대 낙석, 산사태 분석해 가지고 금년에 올렸는데 그것도 잘려 가지고 70억밖에 반영이 안 됐다 하는데, 거기서 떨어져서 죽는 것은 관계없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참 안타까운 일인데요, 저도 북한산 인수봉을 가봤습니다만 예상할 수 없는 데서 그런 일이 생긴 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다 저희가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최봉홍 위원** 완전하게는 안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내면 그러면 한 칠팔십% 이상은 받아야지요. 받는데, 그게 기재부에서 잘렸다 해 가지고 그대로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한 50억 원 정도 해서 120억 원 정도 확보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봉홍 위원** 120억을 확보하면 작년에 얘기했

던 그대로 한 8.5km가 다 되는데 그것 4.85km만 나오고 50억이 잘려 버렸다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그렇기 때문에 각별하게 신경 쓰셔 가지고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최봉홍 위원** 그다음 기상청장께 물겠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최봉홍 위원** 제가 국회에 처음에 등원하면서 기상청에 요구한 사항이 기상청 자활이었습니다. 그 방법까지 제시를 했는데 그런 관계는 여기 전혀 안 나와 있네요, 금년 예산에?

○**기상청장 고윤화** 자활이라고 그러셨……

○**최봉홍 위원** 기상방송국입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아, 방송국…… 예.

거기 안 들어가 있지만 제가 지난번에 답변드린 대로 저희 자체에서 정책연구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그러면 시정을 해 가지고 만들어서 국민들이 ‘그것 좋더라’ 해서 여론이 전부 나오면 될 것 아닙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하겠습니다.

○**최봉홍 위원** 계속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최봉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남 위원** 장관님, 자연환경 보전 및 관리 사업 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용남 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매년 이월되는 금액이 아주 많습니다.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2013년의 경우에 488억 원이 집행되고 182억 원이 이월됐고요, 2014년도에는 336억이 집행되고 265억이 이월됐고 올해도 8월 현재 집행률이 36.1%예요. 매년 이렇게 많은 금액이 집행이 안 되고 이월되고 있는데 올해 예산안을 보니까 전년 대비 27.2% 증액된 504억 원으로 지금 편성이 됐거든요.

왜 이렇게 집행이 안 됩니까, 이것?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게 소위 포괄보조사업, 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

서 편성권이 저희 환경부에 있지 않고 지자체가 편성을 하다 보니까 또 지역주민들이 선호하는 이런 시설들이라고 생각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러 가지 장애에 걸려서 아마 집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 부진이 우려되는 사업은 좀 조정을 하자고 기재부에 의견을 제시하고는 있는 상황입니다.

○**김용남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생활기반개정이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제대로 집행도 못할 예산을 매년 이렇게 매년 많이 올려놓고 있는데 이것을 지방발전특별회계 중에 경제발전계정으로 전환을 해서 환경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장관님 이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신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지적대로 경제발전계정으로 옮겨서 저희가 좀 더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면 한번 기재부하고 상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좀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고 협의를 해서,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한 지 꽤 됐습니다만 현실에서 보면요, 예산 주면 지자체에서 뭐 하나면 단체장 거의 4년 내내 지 선거운동만 해요. 지 선거운동 하는데 예산 이렇게저렇게 쪼개 가지고 다…… 다라는 것은 좀 과장된 표현입니다만 상당 부분이 사실은 주민 편의나 장기적인 어떤 지역이나 국가 발전을 위해서 집행되는 것보다는 거의 단체장 선거운동용으로 예산 집행되는 게 너무 많아요, 현실적으로. 문제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과 관련한 계정도 적극적으로 변경을 해서 중앙부처의 관리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지역발전위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지역발전위원회를 통해서도 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지역 포괄예산을 달라, 자기들 재량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이런 예산을 달라는 요구가 또 한쪽으로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 저희들이 중간에서 쉽지 않은……

○**김용남 위원** 명분은 지방자치라는 명분을 가지고 그렇게 하는데요, 실제 집행 예를 보면, 사실은 이것이 감사원 감사의 어떤 한계도 좀 있고요. 감사원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 업무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사를 진행한다는 것은 인력상

이나 여러 가지 한계가 있고 해서 사실은 실제 집행 면에서는 효용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당장 매년 이렇게 이월되는 예산이 많은 부분부터라도 하나씩 시정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적극적으로 기재부하고 협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리고 이게 예산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요,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사업 관련해 가지고 이게 왜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한가 보니까요, 2013년도에는 집행률이 7.2%, 2014년에는 집행률 9.3% 그리고 올해는 8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3.9%입니다. 물론 음식물 처리시설 설치사업이 내년도 예산안 규모로 보면 18억 1500만 원으로 금액으로는 그렇게 크지 않은 사업입니다만 이게 집행률이 이렇게 저조한 이유를 보니까요, 창원시에 설치하기로 계획했던 음식물 처리시설이 지금 주민 반대 등을 이유로 해 가지고 집행이 제대로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원래 계획대로 하면 이게 2015년, 창원시 시설이요, 2015년 12월에 착공이 돼서 내년 12월에 완공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잡고 했는데 아직까지도 착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봐서는 내년 예산안 18억 1500만 원이 과연 몇 %나 집행이 될지 대단히 의심스러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실이 그렇다면, 지금 창원시의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착공도 안 되고 지연되고 있다면 감액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장관님, 혹시 이 부분 의견 있으십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창원시가 위원님 지적대로 공법을 2019년에 설치하는 것을 전제로 해 가지고 그 이전에는 잠정적으로 그것을 소각시설에서, 말하자면 소각을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바꾸는 것을 결정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은 줄일 것인가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기상청장님!

○**기상청장 고윤화** 예.

○**김용남 위원** 한두 번 나오는 얘기가 아닌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또 기사가 났어요. 유명한 라이더 관련해 가지고 ‘새 둥지가 됐다’ 이런 내

용으로 하고, 관련 담당 직원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다’ 이런 내용의 조간신문 기사 보셨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물론입니다.

○**김용남 위원** 이것에 대해서 입장은 종전과 변함이 없으신가요?

○**기상청장 고윤화** 종전…… 글썄요, 새 둥지가 됐다는 부분은 관리권이 저희한테 전연 없고요, 저희가 인수하지 않은 장비기 때문에.

○**김용남 위원** 그런데 잠깐만요.

인수하지 않은 것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쓰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지금 직권남용으로 기소된 것 아닌가요?

○**기상청장 고윤화** 직권남용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견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검사·검수 과정에서 확인을 거쳐서 검수·검사를 분명히 하라고 역무대행 계약서에 이미 되어 있고요. 그 과정에서 오히려 이게 잘못된 줄 알면서, 검수·검사가 잘못되면 못 쓰는 장비를 검수·검사가 되면 오작동이 나는데 놔두는 것이 오히려 직무유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면 검찰의 기소가 잘못됐다 그런 내용이에요?

○**기상청장 고윤화** 다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남 위원** 그러니까.

그러면 법원에서 판결이 선고가 되면 따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기상청장 고윤화** 물론입니다. 당연히 따라야지요.

○**김용남 위원** 법원에서 판결이 최종적으로, 결국에는 1심 판결 나도 같은 얘기 할 거고 대법원 확정 판결 나기까지는 기상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을 거라고 예상해도 되겠습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그렇습니다.

○**김용남 위원** 기상청 예산 올해 한번, 이번에 제대로 보겠습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김용남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김용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우원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식 위원** 앞에서도 몇 분 위원님들께서 말

씀하셨는데, 올해 환경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의 개요를 보니까 예산편성 방향의 가장 우선순위 중에 미래환경 수요에 적극적·선제적으로 투자해서 노후상수도 시설 정비 여기를 아주 집중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 예산이 반영이 별로 안 되어 있어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노후상수도관, 노후정수장 교체 이 예산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러니까 이게 우선순위에도 맞지를 않고 그리고 노후상수관 정비사업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노후도가 증가해서 사업비가 급증한다 이런 보고가 이미 되어 있거든요.

2016년에 시작할 경우에 20조가 드는데 이게 2030년 이렇게 늦어질 경우에 51조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빨리 시작을 해야 되는데, 이것 어떻게 하실 겁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참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제가 오면서 2013년부터 계속 재정이 굉장히 취약한 군 단위라도 상수도관 교체사업 이런 것을 지원하자고 하고 있는데 기재부……

○**우원식 위원** 그런데 이게 지난번에 충남에 아주 가뭄이 심해서 여기에 대책을 정부와 새누리당이 10월 14일 날 했는데 400억 규모의 긴급 종합대책 이런 것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218억을 투입해서 노후상수도관 개량하고 200억은 저수지 준설 이런 것으로 했는데, 그때 거기에 환경부도 있었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우원식 위원** 그런데 이 218억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환경부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조차도 수자원공사에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그 사업 내용도 보니까 이게 노후상수관 개량 이 사업이 노후관로 교체가 아니라 감압시설 설치 이런 것들이어서 압력을 떨어뜨려서 누수량을 줄이겠다는 그런 미봉책이고 그리고 이게 지자체 보조가 아니고 투자이기 때문에 이게 수도 사업 운영을 위탁받아서 회수하겠다는, 그래서 결국은 수도요금 올리는 것으로 이게 결과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지자체에서도 반대한다 말이에요.

이런 사업을 왜 환경부가 못 가져오는지 저는 좀 답답해요. 이거 좀 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은 수공이 자기들

시설에 대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로 보서는 지자체에다가, 지자체 고유책무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성격이다 보니까 아마 그것은 하려고 하는 것 같고 저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지자체 고유책무 분야를 좀 하자고 하니까 첫 발 들여놓기를 굉장히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원식 위원** 이게 기재부하고 관련돼 있기 때문에 환경부만 가지고 따져 봐야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환경부가 어떤 의지를 갖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를테면 이렇게 시급한 사업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역점사업이라고 하는 것도 잘 안 되고 노후상수관 개량하는 것 필요하다는 것 서로 다 알면서 수공이 하고 있는 시설 개량하는 데는 예산을 투여하고 실제 필요한 데는 안 주고 이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진짜 필요한 게 저소득층 지원을 위해서 해 오던 저소득층 옥내급수관 개량지원사업 14억 1000만 원 이게 국토부에서 하는 것이랑 비슷하다고 해서 그것 삭제하고 또 신규로 한 취약계층 급수분기관설치사업 11억 3700만 원 이것도 전액 삭감이 돼 버렸어요.

이거 왜 이렇게 되지요? 이런 게 사실은 상당히 시급한 사업 아닙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참 알뜰하게 쓸 수 있는 예산입니다만 저희들이……

○**우원식 위원** 그런데 한정에 위원도 이야기하셨습니다만 물산업 클러스터 이것은 대구 지역의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이거 1000억을 냈는데 오히려 1030억으로 증액돼서 지금 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것 보면 좀 화나요. 어려운 사람들 위해서 알뜰한 예산은 자르고 앞으로 오래 두면 점점 예산이 많이 들어갈 노후상수관 이것은 환경부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데도 안 주고 오히려 대통령 공약사업은 물산업 클러스터 이거 뭐 그렇게 급하다고 여기는 예산까지 더 붙여서 주고요, 그런데다가 작년 예산 100억 중에 지금 12억밖에 안 썼거든요. 이게 아직 공사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제 입찰도 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는데도 전체 2500억 예산 중에 거의 반 정도 되는 예산을 올해 투입한다고, 그것도 늘려서 이렇게 해 줬어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 부분 늘렸다기보다는

저희가 기 기조실에 요구할 때는 1070억 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기재부로부터 받은 전체 실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맞추다 보니까 결국 기재부로 보낼 때는 1000억만 갖는데 기재부 내에서 심의할 때 저희가 싸워 가지고 1070억 원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확보해 놓은 상황입니다.

○**우원식 위원** 이거 이렇게 급하게 할 일은 아닌 것 같아요. 15년부터 18년까지 하는데 16년에 이렇게 저소득층한테 가야 될 예산도 잘라 가면서 노후상수도 정말 시급한 사업도 안 해 가면서 이렇게 할 일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감액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생태하천복원사업이요, 이게 지난번에 감사원이 환경부 생태하천복원사업에 대한 감사 결과를 10월 15일 날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보니까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되어 있지 않아서 하천기본계획에 따라서 하폭을 넓히는 경우에, 그런 하천정비사업 할 경우에 이미 진행한 생태공원 시설물 철거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이거 아주 잘못됐다 그래서 그 피해 규모가 4802억에 이르고 있다 이런 것인데 여기에 그거 반영되지 않은 예산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얼마나 되느냐 하면 지금 2016년 예산 규모가 768억인데 아직 설계 단계인 사업이 27개로 564억이고요, 그리고 여기에 한 2682억 원이 지역발전특별회계사업으로 생태하천복원사업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에서 감사원에서 감사 결과에 따라서 삭감되어야 될 것은 삭감돼야 되겠다 이렇게 보는데……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1분만 더……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감사원 감사는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2014년도에 국토부하고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서로 그런 충돌 문제가 있어 가지고 체결하면서 앞으로는 하천기본계획에 이것을 반영을 하자 그렇게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있고 실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감사원 감사는 국토부하고 협약 체결하기 이전 것들을, 사업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지자체에 확인해 보니까 지금 대부분 거기에 반영을 했거나 반영을 안 했어도 하천사업을 하면서 충돌이 안 되게끔 조치를 하고 있노라 이렇게 일차적으로는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거 확인해 보세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 34개 지방자치단체 거기의 42개의 지방하천에서 하천기본계획을 반영할 경우에 문제가 생기는, 지금 계획상 문제가 생기는 계획이 굉장히 여러 군데예요. 그게 한 564억 원 정도로 보입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이……

○**우원식 위원** 그거 확인해서, 그 예산들 가지고 앞에서 이야기한 노후상수관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에 필요한 예산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해야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런데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갈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이게 포괄보조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특회계거든요.

○**우원식 위원** 지특회계인데 이게 지특회계 중에 생활기반계정으로 되어 있어서 그것은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습니다만 이걸 변경하면서 지특회계의 경제발전계정으로 포함시키면 중앙정부에서 새로운 목적을 뒤서 할 수 있는 거니까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특회계는 포괄로 해서 이미 기재부하고 지자체하고 양해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금액을 조정 못 하거든요, 환경부에서도.

○**우원식 위원** 그런데 한번 좀 잘 살펴보세요. 중앙정부가 예산편성권은, 경제발전계정으로 편성하면 가능하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전체 절차를, 그런 절차를 먼저 거치면 모르겠는데 지금은 이게 아마 쉽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우원식 위원** 그런 노력을 좀 하시라 이것입니다. 이게 불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되고 꼭 필요한 사업에는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히 취약계층이나 노후상수관 개선을 위해서 예산들을 어떻게든지 편성을 좀 해야 되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우원식 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우원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인영 위원** 우선 전체적인 것부터 한번 여쭙보겠습니다.

2016년 총지출이 6조 7130억 원으로 전년 대비

일점몇 퍼센트, 그러니까 654억 감소한 것으로 되어 있고 환특회계가 2.1% 958억 감소했고, 기금은 3.3% 328억 증가한 것으로 이렇게 되었는데 이 원인을 뒤로 보시는 것입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내년도 예산 편성한 것에 보면 정부 안에서 세수가 부족하다 보니까 아마 40조 원 정도 이렇게 국채를 발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인데다가 한쪽에서는 사회복지 수요가, 법정 수요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SOC 쪽에는 전반적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라든가 산업부라든가 이런 데 많이 줄어들었는데 저희 환경부도 SOC 성격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조금이지만 0.7% 정도 세출에서 줄어들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세입이 줄어들 것을 예상하고 세출을 조정하는 과정이었던 것이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제가 좀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수질개선 SOC 사업에서 구조조정을 통해서 내실화를 추구했다’ 이렇게 보고를 하셔서 원인과 결과가 좀 뒤바뀐 것 같아서 제가 지적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수질 분야는 저희도 새로운 수요를……

○**이인영 위원** 아니, 그게 왜 그러느냐 하면요, 실제로 이거 내실화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구조조정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줄어든 게 아니라 세입에 맞춰서 세출을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만약에 내실화를 했다면 여기……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내세운 게 아까 실장님, 제가 말꼬리 잡는 것 같은데 죄송하긴 하지만 ‘면 단위의 하수관거정비사업은 200억 오히려 늘렸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지금 한정에 위원님도 그렇고 우원식 위원님도 그렇고 새누리당 다른 위원님도 제가 얼핏 들으니까 상수관망 정비와 관련해서 지적하신 위원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만약에 면 단위 하수관거 정비하는 과정에서 200억 늘리는 과정처럼 상수관망정비사업에 증액된 부분들이 있다면 내실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하수관만 늘려서 내실화가 된다는 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반쪽으로밖에 인정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1년

에 5000억 가까운 돈들이 땅속에 흘러들어가지 않습니까, 누수율이 높고? 실제로 상수관이 노후화로 인해서 파열돼 가지고 땅속으로 상수도가 흘러들어 가면 그만큼 5000억이라는 돈이 1년에 땅속으로 뿌려지는 건데요. 그걸 바로잡는 것보다 더 우월한 구조조정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경제 당국, 재정 당국도 좀 모자란 사람들이 아니면 이런 걸 이렇게 방치하면서 내실화라고 얘기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위원님 지적한 대로 참 안타깝게도 연간 5000억씩 누수가 되고 있는데 그걸 막았을 때 1차 혜택은 해당 시군이거든요. 그런데 해당 시군이 아직 열의가 없어서 저희들이 좀 도와주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은 그 첫발 디더 놓으면 빙산처럼 보이는 건 일부만 보이고 그 밑에 너무나 큰 게 들어 있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지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직 설득을 잘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인영 위원** 아니, 빙산의 일각만 보이면 그거 밑의 빙산까지 다 깨버려야 되는 게 이게 맞는 것이지요. 그렇다고 해서 땅속에다 계속 1년에 5000억씩 부어도 된다는, 그걸 방치한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장관님 말씀하신 대로 상수관망정비사업에 100억 그다음에 정수장 정비에 34억 이런 것들이 전액 삭감된 것 이런 것들은 다시 상임위에서 증액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저희도 동의합니다.

○**이인영 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합리적인 구조조정이다, 그렇지 않고 지금 환경부가 이야기한 것, 하수관만 이야기한 부분들은 반쪽밖에 안 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측면에서 문제 제기가 가능한데요. 국회에 제출된 2016년 환경부 예산이 크게 4개의 비판점을 가지고 있어요. 저탄소 협력금제도 시행 유보로 인해서 국민 세 부담은 늘어나는데 반대로 국민 세 부담 증가 예산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차량 구매 보조금 이런 지원사업은 늘어나고 있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올해 진행 실적 이런 것들 보면 9월 현재 33%밖에 안 되니까 내년에 늘어난다 하더라도 이 집행실적의 비율을 보면 내년에 그렇게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지도 않은데 이 부분들은 또 확실히 증액해 놓으셨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 부분은 아까 다른 위원님 질의에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하이브리드차가 네 차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최소한 일곱 차종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어져서 아마 4만 대 보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게 감액이……

○**이인영 위원** 아니, 도와드리지 않겠다고 말씀드리는 건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감액이 되면 이게 예특이기 때문에, 에너지특별회계이기 때문에 이후에 저희가 계속해서 영향을 받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런 것들을 조절을 하면, 물론 돈에 꼬리표가 있기는 합니다만 전체적인 실링 조절을, 배분을 할 때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으면 상수도는 날아가고 이런 데는 그냥 증액하고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반복됐을 것 같지는 않은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에너지특별회계는 저희들 실링에 따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인영 위원** 예, 알고 있는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저희들이 투쟁을 해 가지고 확보해 놓은 것입니다, 에너지특별회계는.

○**이인영 위원** 투쟁했다고 그러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깨끗한 물 공급하기 위한 노후 상수도 및 정수장 이런 부분들은 없어지고 지금 우원식 위원님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대통령의 일정한 공약사업이기도 하고 또 내년 총선 앞두고 선심성으로 비쳐지는 물산업 클러스터 사업 이런 것들은 대량 그대로 반영되고 오히려 증액돼서 반영됐단 말이에요. 이것도 또 투쟁해서 확보하신 것이라고 그러시겠지요. 아까 대답하시는 거 보니까 그런데……

○**환경부장관 윤성규** 그것은 또 이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 물산업이 반도체 시장의 2배입니다. 또 우리나라도 생수만 해도 휘발유……

○**이인영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런 물산업의 부분들에 투자하는 부분들은 전액 130억 이상 삭감시켜 놓고 이런 데는 30억 이상 늘리느냐 말이

예요. 5000억을 그냥 땅속에다가 그냥 뿌려 박으면서……

○**환경부장관 윤성규** 이 부분은……

○**이인영 위원** 그게 안 맞는 얘기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2017년까지 저희들이 마쳐야 되기 때문에 거의 절반 예산을 내년에 투입을 해야만 2017년에 마칠 수 있고요, 또 내년도에 실제 집행이 가능한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감액 대상이라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물복지 외면 예산에 있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문제 이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모니터링 하고 그러겠다고 대통령도 공약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공약을 파기하고 실제로 4대강 모니터링 예산 전액 삭감됐잖아요. 올해도 하나도 반영 안 됐잖아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이 부분은 지난번에 국감 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한번 보자라고 하는 게 재정 당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국회 논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잘 노력을 하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인영 위원** 저는 뭐 상임위에서 당연히 복원돼야 되고 편성돼야 한다고……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어차피 마무리할 거잖아요?

○**위원장 김영주** 예.

○**이인영 위원** 상임위 예산심의 과정에서 당연히 편성되고 또 복원되고 증액해야 한다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는 과정에서 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여야 간의 혹은 지방자치체 간의 어떤 균형 이런 부분들이 무너진 흔적 이런 것들이 좀 보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여당을 위한 선심성 총선 예산 이런 것들이 편성된 그런 흔적들도 보이고 그러는데 물론 대표적인 것이 대구의 물산업 클러스터에 대한 증액 편성 이런 것들로 보이는데요.

그런 점들이 이번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서 좀 조정돼야 된다, 균형을 다시 취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소위에서 예산심의 할 때 정부의 변경된 긍정적 준비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 나머지는 뭐 서면질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

또 있습니까?

○이인영 위원 한 가지만 더……

○위원장 김영주 말씀하십시오.

○이인영 위원 특히 소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노후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관련해서 그중에 특히 싱크홀 재난 예방과 관련해 가지고 예산 편성한 부분들이 기재부에서 전액 삭감된 것 있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우선 장관님 의견 듣고 또 소위에서도 의견을 청취하고 싶은데요. 1000억을 요청했는데 기재부에서 삭감한 주 이유가 됩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보조금관리법의 시행령상 서울시는 지원 대상이 아니다 이런 입장을 기재부가 견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링 내로 250억 원, 실링 외로 750억 원을 가져왔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장관님한테도 말씀드렸지만 싱크홀 재난 예방과 관련해서 특히 생명안전 분야를 지금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사회적 현실에서 말이지요, 지자체의 어떤 재정자립도, 재정 여력 뭐 이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 이것만 가지고 이것을 볼 수는 없다, 대형사고가 어디에서 많이 나느냐 또 싱크홀 사고의 빈도수가 어디가 많냐 등등 이런 종합적인 판단 기준을 가지고 이 문제를 대처해야지 단순히 재정자립도의 문제만 가지고 이 잣대를 들이댔다가 현실적으로 싱크홀 재난이 발생할 때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냐, 그러면 그 책임을 지방자치체로 넘길 것이냐, 다 전가시키고 중앙정부는 아무 책임이 없다 이렇게 하고 중앙정부만 발 뺏을 것이냐 이런 점들을 감안하면 저는 올바른 판단은 아니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기재부를 중심으로 한 재정 당국어.

장관님, 공감하시는 문제 아닐까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환노위에서 좀 적극적으로 심의해 주시면 저희들이 재정 당국하고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다시 이 문제는 복원하고, 서울시에서 요청했던 1900억 이런 것에 비하면 뭐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인데요. 그리고 1000억을 편성해서 이게 다 서울시로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재정 당국하고 환경부가 다시 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여집니

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우선 환노위에서 답아 주시면 한번 적극적으로 뛰도록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것으로 위원님들의 질의를 모두 마쳤는데 보충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장관님, 저도 서면질의에는 넣었지만 제가 한 가지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우원식 위원이나 이인영 위원이나 많은 위원님들께서 물산업 클러스터 예산 가지고 장관님 말씀하실 때 물산업이 수출산업의 주력산업이 될 것이다 해서 요청한 예산을 100% 다 반영을 하고 또 기재위에서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력산업이 되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환경부장관 윤성규 관광산업도 금년에 메르스로 인해서 40억 불……

○위원장 김영주 제가 관광산업을, 긍정적인 답변을 하신 것인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적자 난다고 하는 것 보면 굉장히 규모가 큼니다.

○위원장 김영주 대통령께서 이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공약이고 기회가 있으실 때마다 우리나라가 자원도 부족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내수도 어렵고 그러니까 외국인을 많이 들어오게 해서 관광산업을 활성화시켜야 된다고 이렇게 하셔서, 특히 저희 영등포 지역 같은 경우는 학교 앞 150m도 안 되는 데인데 거기다 관광호텔을 짓는데 준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소송에서 졌습니다. 그럴 정도로 관광산업을 육성을 한다고 정부에서 하고 있는데, 저는 하수관거가 싱크홀에 대한 안전 문제도 있지만 그로 인한 악취가 우리 관광산업을 망쳐 놓는 가장 1순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 김영주 그래서 저는 장관님께서 앞서 특별시에는 예산 관련돼 가지고 직접 예산을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기재부에서 다 삭감을 했다 그런 얘기인데 작년에 150억 기재부에서 예산 받은 것 기억하시지요? 2015년도 예산요.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위원장 김영주 그러면 저는 적극적으로, 우선 우리 상임위에서 내년도 예산을 하기 전에 기재

부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살려 가지고 오셨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서울특별시의 하수관거가 안전에 대한 싱크홀 또 오래된 하수관거로 인한 누수율, 아까 상수도의 누수율도 있지만 하수관거에 대한 누수율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장관님께서, 특히 우리 영등포 지역의 지하 하수관거는 굉장히 양호한 데로 모셨습니다. 다른 지역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지난번에 조선일보에 구로 지역의, 이인영 위원 지역에 난 신문 그 내용도 보셨지만 이 부분은 안전·약취 여러 가지도 있지만 관광산업하고 저는 굉장히 밀접되어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소위 위원님들께서 이것을 다 다루시겠지만 정부하고 적극적으로 이 문제만큼은 관광산업과 직결된 그 부분까지 함께 포함해서 봐 주셔야 되는데 정말 아쉬운 게 물산업 바로 항목 위가 노후하수관시설정비 항목인데 거기서는 2015년 대비해서 276억 삭감하고 또 교체개보수 투자 비율도 2015년보다 28% 수준으로 이게 예산이 많이 깎였습니다, 안전점검 문제도.

그래서 이런 부분은 소위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루시겠지만 장관님께서 기재부에 대해서 꼭 서울특별시 예산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 관광산업의 일환으로 약취 문제도 함께 파악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당부드립니다.

○**환경부장관 윤성규**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저……

○**위원장 김영주** 예, 이인영 위원님.

○**이인영 위원** 다른 현안질의를 잠깐만 하겠습니까.

○**위원장 김영주** 예산 관련된 것입니까?

한 3분 드릴게요.

○**이인영 위원** 꼭 예산은 아닌데요.

○**위원장 김영주** 말씀하십시오.

○**이인영 위원** 기상청장님, 항공라이다 관련해 가지고 제가 좀, 꼭 예산과 직결된 것은 아니지만 윈드라이다 불법 설치 문제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적 안 할 수가 없어서 하는데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이인영 위원** 아까 도농사업단 관련해 가지고 조금 유사한 질의도 있었습니다만 지난번에 국정감사 할 때 말이지요, 10월 1일자로 계약해지를, 도농사업단이 조달청에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이렇게 대답하셨잖아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했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지금 이게 9월 30일까지 최종납품과 계약이행 보증금이 입금되지 않아서 도농사업단이 조달청에게 정식으로 계약해지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었던 것이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런데 10월 5일 사업단 연구원이 KT 중량지점과 KT 광화문지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이미 한 곳은 무단으로 설치가 완료되어 있고 나머지 한 곳은 설치 중이었고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리고 10월 5일 KT 중량지점과 KT 광화문지점에 이미 정비업체에 불법적으로 장비가 설치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상청에 도농사업단이 이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못 들었습니다. 제가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보고를 못 받으신 거예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이인영 위원** 일단 보고도 못 받고 그다음에 불법적으로 설치가 강행됐고……

불법적입니까, 아닙니까?

○**기상청장 고윤화** 글썽요, 위법이나 아니냐 그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적절하지는 못했던 것, 당연히 협의를 해서 설치를 했어야 되는데 협의가 안 된 채로 설치한 것은 맞습니다.

○**이인영 위원** 일단 KT 중량지점과 KT 광화문지점의 설치장소는 국민들의 혈세로 임대료를 지급한 공간이고 반드시 정당한 절차와 담당기관의 허가를 받고 출입해야 하고 장비의 설치 또한 마찬가지로 아니겠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이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불법인데 위법적인 논란은 또 남아 있다 그런데 사전에 협의하고 그 과정에서 충분한 동의와 승인 절차를 거쳐서, 특히 기상청 도농사업단에게 일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설치가 됐어야 마땅한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것은 맞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것 그냥 이 상태로 방치하실 거예요?

○**기상청장 고윤화** 법적으로 지금 검토를 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자문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인영 위원 정부기관과 사업단을 무시하는 기상장비업체의 일종의 오만이고 불법에 대해서 기상청이 모든 역할을 동원해서, 모든 역량을 동원해서라도 단호하게 대처해야지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게……

○이인영 위원 그냥 어물쩍 넘어가면 기상청의 명예뿐만 아니라 정부 전반의 어떤 조달체계 이런 것들도 그냥 흐트러지고 정부의 명예나 이런 것들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빠지지 않겠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입체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적절한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인영 위원 언제까지 하시겠어요?

○기상청장 고윤화 시간을 조금 주십시오. 저희들이 여러 건이 지금 걸쳐져 있어 가지고요. 하여튼 최우선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번 주 중으로 검토를 끝내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이번 주 중으로 그 방침과 관련해서 검토해서 결정하시고 보고를 해 주시고요.

○기상청장 고윤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인영 위원 진행의 옳고 그름을, 절차상의 어떤 문제가 있고 없고를 떠나 가지고 그 이전의 과정에서,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태 속에서 그냥 무시하고 이렇게 일방적으로 설치하고 이런 것 그냥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기상청장 고윤화 예.

○이인영 위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주 이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부와 기상청 소관 2016년도 예산안과 환경부 소관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에 대한 대체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체토론을 마친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이상 3건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겠습니다.

소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예정된 일정대로 예산안 등이 처리될 수 있도록 충실히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대체토론 중에 이인제 위원님, 권성동 위원님, 민현주 위원님, 주영순 위원님, 이석현 위원님, 은수미 위원님, 최봉홍 위원님, 한정애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양창영 위원님, 심상정 위

원님, 우원식 위원님, 장하나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김용남 위원님, 그리고 저도 서면질의가 있었습니다.

정부 측에서는 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회의 전까지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에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질의와 답변 내용은 모두 위원회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장관 및 기상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끝까지 자리를 지켜 주신 김용남 위원님, 이자스민 위원님, 이인영 위원님, 그리고 방금 전까지 장하나 위원님이 계셨습니다. 한정애 위원님께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손충덕 수석전문위원과 보좌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고용노동부 소관 2016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출석 위원(16인)

권성동	김영주	김용남	민현주
심상정	양창영	우원식	은수미
이석현	이인영	이인제	이자스민
장하나	주영순	최봉홍	한정애

○출석 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손충덕
전문위원	김양건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환경부			
장차 기획조정실장	관관	윤성규	정연만
환경정책실장		백규석	이정섭
물환경정책국장		김영훈	이민호
자연보전국장		홍정기	홍진석
자원순환국장		최홍진	정희석
기후대기정책관		정회석	박광석
상하수도정책관			
환경정책관			

환경보건정책관 이 호 중  
 국제협력관 박 천 규  
 대변인 남 광 희  
 감사관 이 경 용  
 중앙환경분쟁 이 필 재  
 조정위원장 김 상 배  
 국립생물자원관장 신 진 수  
 국립환경인력개발원장 유 승 직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김 균 관  
 화학물질안전원장 오 중 극  
 한강유역환경청장 백 운 석  
 낙동강유역환경청장 이 희 철  
 영산강유역환경청장 송 형 근  
 수도권대기환경청장 황 계 영  
 원주지방환경청장 유 제 철  
 대구지방환경청장 조 병 옥  
 새만금지방환경청장 이 시 진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 보 환  
 국립공원관리공단 이 재 현  
 이사장 최 재 천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안 영 희  
 국립생태원장 최 용 철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장 고 윤 화  
 한국상하수도협회장 정 흥 우  
 상근부회장 양 진 관  
 기상청 장 육 명 렬  
 차장 이 우 진 동  
 기획조정관 양 명 렬  
 예보국장 유 희 동  
 관측기반국장 김 성 균  
 기상서비스진흥국장 윤 원 태  
 지진화산관리관 조 천 호  
 국립기상과학원장 이 미 선  
 국가기상위성센터장 전 준 모  
 기상레이더센터장 박 정 규  
 항공기상청장 이 희 상  
 한국기상산업진흥원장 정 진 승  
 APEC기후센터장 홍 성 유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장

**【보고사항】**

**○위원 사임 및 보임**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이완구	이인제	새누리당	2015. 10. 15

**○의안 회부**

**물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이종진 의원 대표발의)

(2015. 8. 26 이종진·정갑윤·주호영·서상기·유승민·노철래·권성동·이정현·조원진·김상훈·홍지만·양창영·김희국·권은희·윤재옥·류성걸·최봉홍·민현주·김용남 의원 발의)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2015. 8. 26 주영순·나성린·류지영·김태환·이노근·황주홍·이완영·김상민·김정록·신의진 의원 발의)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2015. 8. 26 주영순·이한성·조명철·황주홍·양창영·나성린·류지영·김태환·이노근·이완영·김을동·김상민·김정록 의원 발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주영순 의원 대표발의)**

(2015. 8. 26 주영순·나성린·류지영·김태환·이노근·황주홍·이완영·김상민·김정록·신의진 의원 발의)

이상 4건 8월 27일 회부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5. 8. 27 우원식·인재근·장하나·배재정·은수미·이인영·한정애·이윤석·이개호·이미경·김현미·박민수·김성곤 의원 발의)

8월 28일 회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정식 의원 대표발의)**

(2015. 9. 1 조정식·이개호·김성곤·김윤덕·부좌현·박남춘·이찬열·정진후·이인영·우원식·김경협·김영주·장병완·전정희·변재일·주승용·강동원·김현미·강기정·원혜영·오영식·홍영표·김기식·박홍근·김용익·김동철 의원 발의)

9월 2일 회부됨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인재근 의원 대표발의)**

(2015. 9. 3 인재근·진선미·최동익·강동원·이목희·우원식·이인영·송호창·김승남·최규성·윤관석 의원 발의)

9월 4일 회부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5. 9. 4 이석현·이언주·유인태·이춘석·

김현미 · 안규백 · 윤후덕 · 변재일 · 임수경 · 박광온 · 김관영 의원 발의)

9월 7일 회부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현주 의원 대표발의)**

(2015. 9. 8 민현주 · 류지영 · 유승민 · 이한성 · 김정록 · 조명철 · 이종훈 · 박윤옥 · 이종진 · 이자스민 의원 발의)

9월 9일 회부됨

**악취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5. 9. 10 이석현 · 조정식 · 변재일 · 송호창 · 김관영 · 전정희 · 김상희 · 배재정 · 윤후덕 · 한정애 · 박광온 의원 발의)

9월 11일 회부됨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9. 11 정부 제출)

9월 14일 회부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우원식 의원 대표발의)**

(2015. 9. 24 우원식 · 김현미 · 이목희 · 이미경 · 이학영 · 은수미 · 장하나 · 전순옥 · 한정애 · 홍종학 의원 발의)

9월 25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 발의)**

(2015. 9. 30 양창영 · 유승민 · 황주홍 · 이한성 · 정희수 · 한선교 · 김제남 · 박윤옥 · 김종태 · 이종진 의원 발의)

10월 1일 회부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

(2015. 10. 5 이석현 · 윤호중 · 신기남 · 강기정 · 우원식 · 박광온 · 한정애 · 김현미 · 신정훈 · 장하나 의원 발의)

10월 6일 회부됨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4 신상진 · 김을동 · 이한성 · 이종진 · 박성호 · 이노근 · 나성린 · 박덕흠 · 홍지만 · 전하진 의원 발의)

10월 15일 회부됨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김한길 의원 대표발의)**

(2015. 8. 28 김한길 · 이개호 · 이찬열 · 서영교 · 김기식 · 김성곤 · 박홍근 · 민홍철 · 유승희 · 안규백 · 조정식 · 황주홍 · 원혜영 의원 발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발의)**

(2015. 8. 28 양창영 · 유승민 · 이한성 · 최봉홍 · 강기윤 · 송영근 · 김종태 · 류지영 · 주영순 · 이정현 의원 발의)

이상 2건 8월 31일 회부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춘진 의원 대표발의)**

(2015. 8. 31 김춘진 · 강창일 · 김성곤 · 김윤덕 · 유성엽 · 윤관석 · 박윤옥 · 장병완 · 장하나 · 전순옥 의원 발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강동원 의원 대표발의)**

(2015. 8. 31 강동원 · 이개호 · 김영록 · 이학영 · 안규백 · 인재근 · 김우남 · 김성곤 · 윤호중 · 변재일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1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 발의)**

(2015. 9. 4 이석현 · 이언주 · 유인태 · 이춘석 · 김현미 · 안규백 · 윤후덕 · 변재일 · 김경협 · 도종환 의원 발의)

9월 7일 회부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한정애 의원 대표 발의)**

(2015. 9. 8 한정애 · 조정식 · 전정희 · 우원식 · 박광온 · 진선미 · 인재근 · 이인영 · 장하나 · 이석현 · 김춘진 의원 발의)

9월 9일 회부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이석현 의원 대표발의)**

(2015. 9. 10 이석현 · 변재일 · 송호창 · 전정희 · 김상희 · 배재정 · 윤후덕 · 한정애 · 박광온 · 김현 의원 발의)

9월 11일 회부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양창영 의원 대표 발의)**

(2015. 9. 11 양창영 · 이한성 · 송영근 · 류지영 · 박맹우 · 이종배 · 하태경 · 황주홍 · 주영순 · 김을동 의원 발의)

9월 14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2015. 9. 16 강기윤 · 강길부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광립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완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남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희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립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립 · 신동우 · 신상진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안상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군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은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헌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무성 의원 대표발의)

(2015. 9. 16 강기윤 · 강길부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광림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완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남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희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립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립 · 신동우 · 신상진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안상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군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은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헌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군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은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헌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제 의원 대표발의)

(2015. 9. 16 강기윤 · 강길부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광림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완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남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희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립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립 · 신동우 · 신상진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안상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군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은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헌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종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5. 9. 16 강기윤 · 강길부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광립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완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남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희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립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상진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안상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균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은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헌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원유철 의원 대표발의)**

(2015. 9. 16 강기윤 · 강길부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광립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완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남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희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립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상진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안상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균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은 · 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헌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해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인제 의원 대표발의)**

(2015. 9. 16 강기윤 · 강길부 · 강석호 · 강석훈 · 강은희 · 강창희 · 경대수 · 권성동 · 권은희 · 길정우 · 김광립 · 김기선 · 김도읍 · 김동완 · 김명연 · 김무성 · 김상민 · 김상훈 · 김성찬 · 김성태 · 김세연 · 김영우 · 김용남 · 김용태 · 김을동 · 김장실 · 김재경 · 김재원 · 김정록 · 김정훈 · 김제식 · 김종태 · 김종훈 · 김진태 · 김태원 · 김태호 · 김태환 · 김태흠 · 김학용 · 김한표 · 김희선 · 김희국 · 김희정 · 나경원 · 나성린 · 노철래 · 류성걸 · 류지영 · 문대성 · 문정립 · 민병주 · 민현주 · 박대동 · 박대출 ·

박덕흠 · 박맹우 · 박명재 · 박민식 · 박상은 · 박성호 · 박윤옥 · 박인숙 · 박창식 · 배덕광 · 서상기 · 서용교 · 서청원 · 손인춘 · 송광호 · 송영근 · 신경림 · 신동우 · 신상진 · 신성범 · 신의진 · 심윤조 · 심재철 · 안상수 · 안홍준 · 안효대 · 양창영 · 여상규 · 염동열 · 오신환 · 원유철 · 유기준 · 유승민 · 유의동 · 유일호 · 유재중 · 윤명희 · 윤상현 · 윤영석 · 윤재옥 · 이강후 · 이균현 · 이노근 · 이만우 · 이명수 · 이병석 · 이상일 · 이에리사 · 이완구 · 이완영 · 이우현 · 이운룡 · 이이재 · 이인제 · 이자스민 · 이장우 · 이재영 · 이재오 · 이정현 · 이종배 · 이종진 · 이종훈 · 이주영 · 이진복 · 이채익 · 이철우 · 이학재 · 이한구 · 이한성 · 이현승 · 이현재 · 장윤석 · 장정은 · 진하진 · 정갑윤 · 정두언 · 정문헌 · 정미경 · 정병국 · 정수성 · 정용기 · 정우택 · 정희수 · 조명철 · 조원진 · 조혜진 · 조현룡 · 주영순 · 주호영 · 진영 · 최경환 · 최봉홍 · 하태경 · 한기호 · 한선교 · 함진규 · 홍문중 · 홍문표 · 홍일표 · 홍지만 · 홍철호 · 황영철 · 황우여 · 황인자 · 황진하 의원 발의)

이상 6건 9월 17일 회부됨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5. 9. 21 장하나 · 이미경 · 신기남 · 홍종학 · 전순옥 · 은수미 · 윤관석 · 우원식 · 이학영 · 이인영 · 한정애 · 인재근 · 진선미 · 정성호 · 김춘진 의원 발의)

9월 22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5. 9. 23 장하나 · 이개호 · 김광진 · 박지원 · 이미경 · 신기남 · 진선미 · 우원식 · 이목희 · 이인영 · 한정애 · 김상희 · 김춘진 의원 발의)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장하나 의원 대표발의)

(2015. 9. 23 장하나 · 이개호 · 김광진 · 박지원 · 이미경 · 신기남 · 진선미 · 우원식 · 이목희 · 이인영 · 한정애 · 김상희 · 김춘진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심상정 의원 대표발의)

(2015. 9. 23 심상정 · 김제남 · 박광운 · 박원석 · 서기호 · 이석현 · 정성호 · 정진후 · 진선미 · 홍영표 의원 발의)

이상 3건 9월 24일 회부됨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2015. 9. 25 정호준 · 추미애 · 이인영 · 한정애 · 우원식 · 홍종학 · 김성주 · 김용익 · 장하나 · 은수미 · 김관영 · 이석현 의원 발의)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2015. 9. 25 진성준 · 오영식 · 인재근 · 최규성 · 김윤덕 · 우원식 · 변재일 · 윤관석 · 박홍근 · 윤후덕 · 이목희 · 안규백 · 김관영 · 정성호 의원 발의)

이상 2건 9월 30일 회부됨

**고용정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박병석 의원 대표발의)

(2015. 10. 2 박병석 · 황주홍 · 안규백 · 노웅래 · 김성곤 · 이찬열 · 박광운 · 유인태 · 신학용 · 민병두 · 김현 · 정성호 의원 발의)

10월 5일 회부됨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2015. 10. 7 신기남 · 황주홍 · 정성호 · 이개호 · 우원식 · 박민수 · 전해철 · 김우남 · 남인순 · 오영식 의원 발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15. 10. 7 정부 제출)

이상 2건 10월 8일 회부됨

**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10. 15 정부 제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안효대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5 안효대 · 윤명희 · 민현주 · 민병주 · 안상수 · 나경원 · 박상은 · 신성범 · 강석훈 · 강석호 의원 발의)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5 김영주 · 임수경 · 한정애 · 유인태 · 진성준 · 유은혜 · 김현미 · 윤호중 · 안규백 · 이찬열 · 노웅래 · 유대운 · 김현 · 장병완 의원 발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5 김영주 · 노웅래 · 김민기 · 이원욱 · 이인영 · 한정애 · 유인태 · 진성준 · 유은혜 · 이찬열 · 김현미 · 윤호중 · 안규백 · 유대운 · 김현 · 장병완 의원 발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영주 의원 대표

발의)

(2015. 10. 15 김영주·한정애·유인태·진성준·유은혜·김현미·윤호중·안규백·노웅래·이찬열·유대운·김현·장병완 의원 발의)  
이상 5건 10월 16일 회부됨

**2016년도 예산안**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안**

**2016년도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

(이상 3건 2015. 9. 11 정부 제출)  
이상 3건 9월 11일 회부됨

**○관련의안 회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희 의원 대표발의)**

(2015. 8. 26 강은희·홍지만·이종배·이상일·신상진·박윤옥·문정림·김용남·김희선·전하진·강창희·강길부·송영근·김한표 의원 발의)  
8월 2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김태원 의원 대표발의)**

(2015. 8. 28 김태원·류지영·이노근·이우현·김희국·박성호·이완영·강석호·이학재·이만우·박덕흠 의원 발의)  
8월 3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신혼부부의 지원에 관한 법률안(홍종학 의원 대표발의)**

(2015. 8. 31 홍종학·김광진·김상희·김용익·박남춘·박완주·박지원·박홍근·백재현·설훈·신기남·우원식·우윤근·유성엽·이미경·이인영·전해철·정성호·최재성·홍의락·홍익표 의원 발의)  
9월 1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동철 의원 대표발의)**

(2015. 9. 1 김동철·임내현·김우남·박홍근·이개호·김성곤·강기정·조정식·황주홍·김광진·박혜자·심재권·박남춘 의원 발의)  
9월 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제남 의원 대표발의)**

(2015. 9. 2 김제남·정진후·서기호·박원석·김광진·심상정·황주홍·박민수·강동원·

김성곤 의원 발의)

9월 3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9. 7 정부 제출)  
9월 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동·서·남해안 및 내륙권 발전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

(2015. 9. 8 정부 제출)  
9월 9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5. 9. 18 정부 제출)  
9월 18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원자력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정호준 의원 대표발의)**

(2015. 9. 23 정호준·김민기·강기정·주승용·전순옥·김영록·배재정·이찬열·박홍근·이개호·전병헌·윤관석·최원식 의원 발의)  
9월 24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신기남 의원 대표발의)**

(2015. 9. 24 신기남·이개호·신경민·황주홍·정성호·우원식·박민수·전해철·김우남·남인순 의원 발의)  
9월 2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심재철 의원 대표발의)**

(2015. 10. 5 심재철·권은희·김성찬·김정록·박인숙·손인춘·송영근·유승민·이한성·정세균·홍철호·황주홍 의원 발의)  
10월 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8 김동완·김정훈·이현재·안홍준·김상훈·길정우·김종훈·김한표·이정현·전하진 의원 발의)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동완 의원 대표발의)**

(2015. 10. 8 김동완·안홍준·김상훈·길정우·이진복·김종훈·김한표·이정현·전하진·

홍지만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2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김광림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4 김광림·나성린·정문현·정갑윤·  
이진복·강석훈·윤명희·박명재·정수성·  
이만우 의원 발의)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신성범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4 신성범·유재중·김희선·한선교·  
김재경·정갑윤·여상규·정용기·안홍준·  
이종훈 의원 발의)

이상 2건 10월 15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  
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병국 의원  
대표발의)**

(2015. 10. 15 정병국·권선동·송영근·류지영·  
정미경·김태호·최봉홍·원유철·이이재·  
길정우 의원 발의)

10월 16일 의견제시기간을 소관위원회의  
심사의결일 전일까지로 정하여 회부됨